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3000-001303-10

202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연차보고서

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E20-2023-4

202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연차보고서

등 록 |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 2023. 12.

발 행 인 | 한두봉

발 행 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321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 쇄 처 | (주)프리비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목차

CONTENTS

Chapter I

일반 현황 / 1

Chapter II

2023년 주요 추진 업무 / 11

1. 정책 점검·평가

1.1. 202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점검·평가	15
1.2. 농어촌 영향평가	26
1.2.1. 농어촌 주민의 난방·에너지 비용 경감	27
1.2.2. 도서 지역 해상교통환경 개선	32



2. 조사·연구

2.1. 2023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 점검·분석	39
2.2. 농어촌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48
2.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심층연구	58
2.3.1. 제4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종합평가	59
2.3.2. 지역농림업 발전사업 추진방안 연구	63
2.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 우수사례집 발간	66

3.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지원

3.1. 정책지원 네트워크 구성·운영	77
3.2.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운영 지원	92
3.3.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카드뉴스 및 인포그래픽 제작·홍보	93



CHAPTER

I



일반 현황



❖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소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이하 삶의 질 향상 위원회)’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농어업인삶의질법」) 제 10조에 근거하여 범부처 차원에서 농어업인 등의 복지 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정책을 총괄·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이다.

삶의 질 향상 위원회는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 실적의 점검·평가,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관련 정책에 대한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 및 의견 조정 역할을 담당한다.

삶의 질 향상 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며, 정부부처의 당연직 위원과 민간 전문가 등 위촉직 위원을 포함하여 총 25명 이내(위원장 포함)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농어업인삶의질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제10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①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정책을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2.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 실적에 대한 점검·평가 결과
3. 해당 연도 시행계획
- 3의2.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에 관한 사항
4.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
5. 그 밖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개발 정책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2004. 03.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공포
- 2005. 04. 「제1차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발표
- 2009. 12. 「제2차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발표
- 2010. 07.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
- 2012. 04.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한국농촌경제연구원) 지정
- 2014. 06. 삶의 질 향상 위원회 회의 개최
- 2014. 12.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발표
- 2015. 07. 농어업인 삶의 질 정책지원 네트워크 출범
- 2016. 01. 삶의 질 향상 위원회 분과위원회 설치 운영
- 2016. 11. 삶의 질 향상 위원회 분과위원회·실무위원회 회의 개최
- 2017. 12. 삶의 질 향상 위원회 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 2018. 12. 삶의 질 향상 위원회 보건·복지 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 2019. 09. 삶의 질 향상 위원회 보건·복지 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 2019. 12.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실무위원회 회의 개최 (서면)
- 2020. 02. 삶의 질 향상 위원회 회의 개최 (대면)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발표
- 2020. 12. 삶의 질 향상 위원회 보건·복지 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 2021. 05.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실무위원회 회의 개최 (서면)
- 2021. 06. 삶의 질 향상 위원회 본위원회 개최 (서면)
- 2021. 11. 삶의 질 향상 위원회 보건·복지 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삶의 질 향상 위원회 교육·문화 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 2022. 04.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실무위원회 회의 개최 (서면)
삶의 질 향상 위원회 본위원회 개최 (서면)
- 2022. 11. 삶의 질 향상 위원회 교육·문화 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 2022. 12. 삶의 질 향상 위원회 보건·복지 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 2023. 06.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실무위원회 회의 개최 (서면)
삶의 질 향상 위원회 본위원회 개최 (서면)

❖ 전문지원기관 개요 및 연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어업인삶의질법」 제46조에 따라 삶의 질 향상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되어 농어촌 주민의 정책 수요와 농어촌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농어업인삶의질법」 제46조

제46조(전문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국립·공립 연구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보조한 연구기관 또는 민간 연구기관을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시행계획의 점검·평가
2. 제44조제6항에 따른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의 점검·분석
3. 제45조제2항에 따른 정책의 분석·평가 지침의 검토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정책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원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전문지원기관이 수행하도록 결정하는 사항

▣ 전문지원기관으로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역할

- 농어업인 삶의 질과 관련된 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 농어촌 환경 및 주민 정책 수요 변화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여 관련 정책의 효율성 및 실효성을 높인다.
- 전문지원기관으로서 삶의 질 향상 위원회의 관련 업무를 지원한다.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에 대한 점검·평가, 농어촌 서비스기준 달성 정도 점검·분석, 농어촌 영향평가제도 운영을 지원한다.
 - 농어업인의 삶의 질 실태에 관한 자료를 바탕으로, 다차원적인 분석 결과와 정보를 제공한다.
 - 분야별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홍보·교육·컨설팅 등 지원 활동을 수행한다.



□ 전문지원기관(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혁

- ▶ **2012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
*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2-217호(2012년 4월 19일)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 수행
- ▶ **2013년** |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 수행
- ▶ **2014년** |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지원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 수행
- ▶ **2015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으로 재지정
(2015년~2019년)
*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5-85호(2015년 3월 17일)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질정책연구센터 출범(2015년 7월 1일)
· 삶의 질 정책지원 네트워크 출범(2015년 7월 21일)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 수행
· 삶의 질 향상 정책 컨퍼런스 개최(2015년 7월 21일)
· 삶의 질 향상 정책 대토론회 개최(2015년 12월 29일)
- ▶ **2016년** |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 수행
· 삶의 질 향상 정책 컨퍼런스 개최(2016년 12월 23일)
- ▶ **2017년** |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 수행
· 삶의 질 향상 정책 컨퍼런스 개최(2017년 12월 13일)
- ▶ **2018년** |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 수행
·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종합평가 연구(7개 부문)
· 삶의 질 향상 정책 컨퍼런스 개최(2018년 12월 19일)
- ▶ **2019년** |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 수행
·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수립
· 농어촌 지역정책포럼 개최(2019년 7월 2일)
· 제12차 OECD 농촌발전 컨퍼런스 지원(2019년 9월 24일~26일)

- ▶ **2020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으로 재지정 (2020년~2024년)
 - *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0-101호(2020년 2월 28일)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 수행
 - 제26차 농어촌 지역정책포럼 개최(2020년 6월 30일)

- ▶ **2021년**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 수행
 - 제27차 농어촌 지역정책포럼 개최(2021년 10월 26일)
 - 삶의 질 향상 정책 컨퍼런스 개최(2021년 12월 16일)

- ▶ **2022년**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 수행
 - 202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점검·평가
 - 2022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 점검·분석
 - 농어촌 영향평가 2건 수행
 - 사전협의제도 제도화 지원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심층연구 2건 수행
 - 2022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조사
 - 2022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우수사례집 발간
 - 제28차 농어촌 지역정책포럼 개최(2022년 11월 30일)
 - 삶의 질 향상 정책 컨퍼런스 개최(2022년 12월 20일)

- ▶ **2023년**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 수행
 - 202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점검·평가
 - 2023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 점검·분석
 - 농어촌 영향평가 2건 수행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심층연구 2건 수행
 - 2023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조사
 - 2023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우수사례집 발간
 - 제4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종합평가 포럼 개최
 - 1차: 2023년 10월 27일 / 2차: 2023년 11월 17일 / 3차: 2023년 12월 5일
 - 삶의 질 향상 정책 컨퍼런스 개최(2023년 12월 21일)



❖ 삶의질정책연구센터 개요

삶의질정책연구센터는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삶의 질 정책 추진기반 강화’의 일환으로, 전문지원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내의 전담부서로 2015년 7월 1일 출범하여 운영되고 있다.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中

V. 삶의 질 정책 추진기반 강화

① 범부처 정책 협업 활성화

□ 전문지원기관을 통해 삶의 질 정책 지원 네트워크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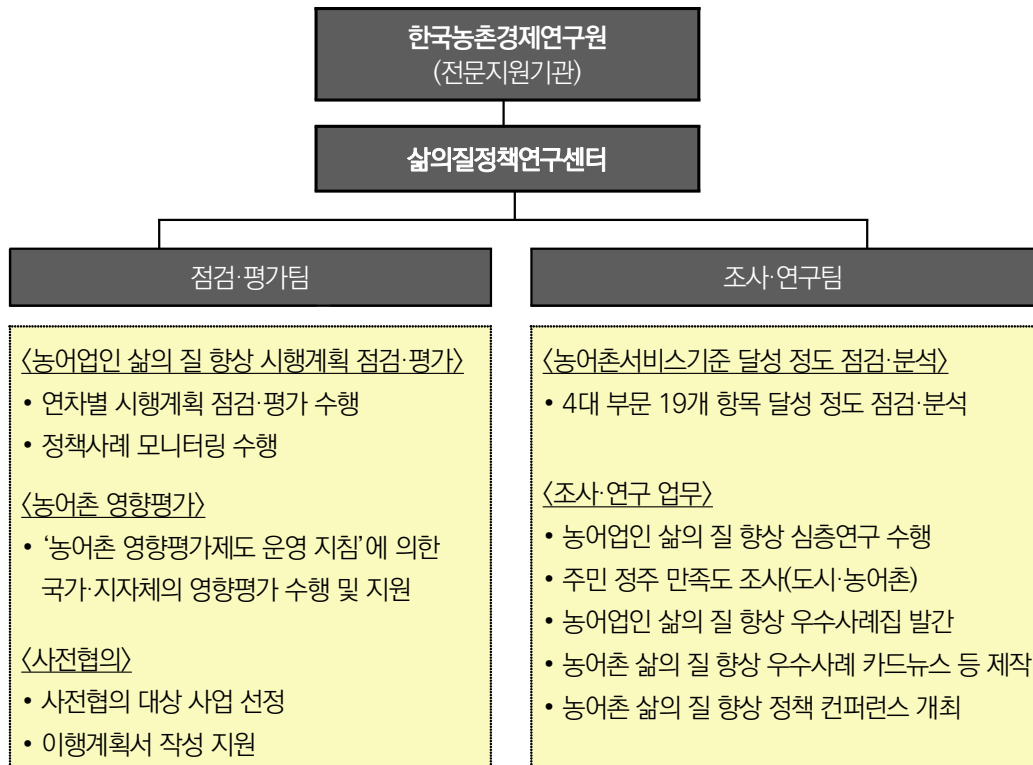
○ 전문지원기관(KREI 지정, '12.5.~) 내에 전담부서로 ‘삶의질정책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분야별 국책연구기관, 시·도 연구원 등과 상시 협력체계 구축('15.3.~)

□ 주요 업무 및 조직 구성

- 매년 시행계획 점검·평가,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 점검·분석, 농어촌 영향평가, 사전협의 등 「농어업인삶의질법」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삶의 질 향상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조사와 연구를 수행한다.
 - **(시행계획 점검·평가)** 기본계획 기간 중 연차별로 수립되는 농어업인 삶의 질 시행계획의 추진 상황과 성과를 점검·평가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 점검·분석)**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에 대해 부문별 세부 항목 달성 정도를 점검·분석하여 농어촌 지역의 삶의 질 수준을 파악한다.
 - **(농어촌 영향평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소관하는 중장기 계획 및 정책, 사업 중에서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과 관련된 과제를 선정하여 농어촌 지역의 경제·사회·문화·환경 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한다.
 - **(사전협의)**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사전협의 대상으로 선정하여 관계 부처가 제도 개선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이행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정책 지원 네트워크 운영)** 다양한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심층연구 수행, 정책 과제 발굴 등 삶의 질 정책과 관련된 연구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관련 연구 경험과 성과를 확산시킨다.
- **(기타 지원 업무)** 삶의 질 향상 우수사례집 발간과 정주 만족도 조사, 홈페이지 운영, 컨퍼런스 개최, 카드뉴스 및 인포그래픽 제작 등 삶의 질 정책의 성과를 홍보하고 확산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삶의질정책연구센터는 점검·평가팀과 조사·연구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CHAPTER

II



2023년 주요 추진 업무





1. 정책 점검·평가

1.1. 202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점검·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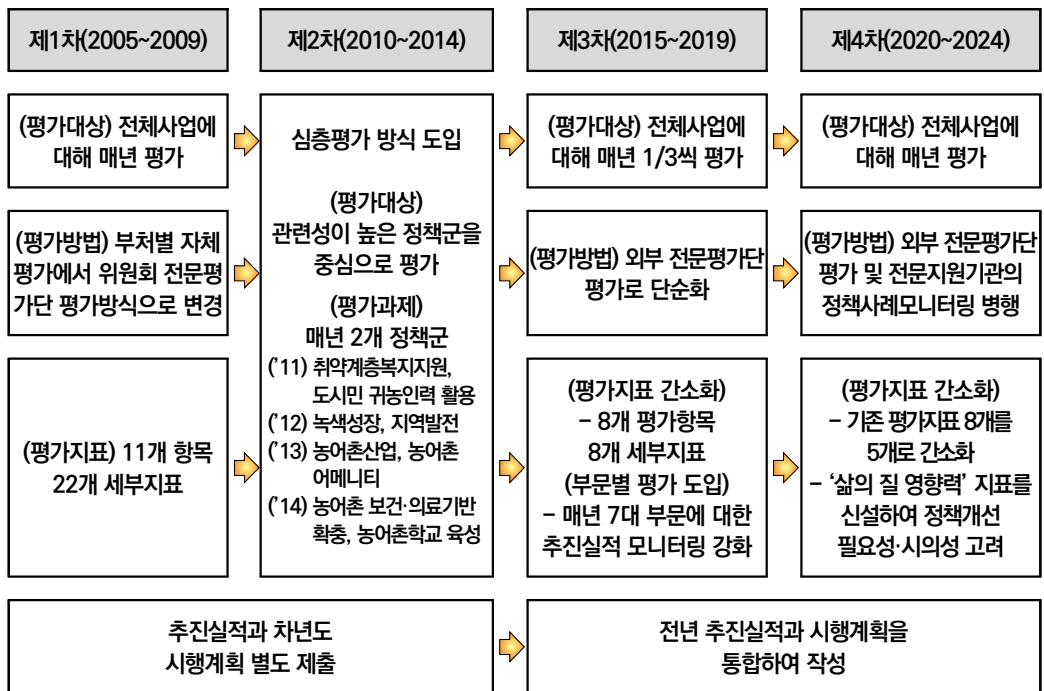
1.2. 농어촌 영향평가

1.1. 202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점검·평가

❖ 점검·평가 개요

-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은 「농어업인삶의질법」에 명시된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에서 연차별로 추진하는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의 추진 내용과 실적을 매년 점검·평가한다.
- 「농어업인삶의질법」 제9조에 따라, 삶의 질 향상 위원회는 매년 중앙부처에서 제출한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해 전문연구기관 등을 통하여 점검·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¹⁾

〈제1~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점검·평가 방법 비교〉



1) 시행계획 점검·평가에 대한 규정 및 자세한 평가절차에 대해서는 「농어업인삶의질법」 제6조, 제9조,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를 참조.



「농어업인삶의질법」 제9조

- 제9조(기본계획 등의 평가)** ① 위원회는 기본계획 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전문연구기관 등을 통하여 기본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매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전문 연구기관 등을 통하여 점검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제10조의2에 따른 시·도 및 시·군·구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는 각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전문연구기관 등을 통하여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를 제11조에 따른 재정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 ⑤ 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점검·평가한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 필요한 제반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 2023년 시행계획 점검·평가는 제4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이하 제4차 기본계획)의 보건·복지, 교육·문화, 정주생활기반, 경제활동·일자리의 4대 전략 164개 과제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 제4차 기본계획에 포함된 178개 사업 중, 기종료 사업 8개, 지방이양으로 예산 집행 및 추진실적 평가 불가 사업 5개, 사업 개편으로 예산 집행 및 추진실적 측정 불가 사업 1개, 총 14개 사업이 2023년도 점검·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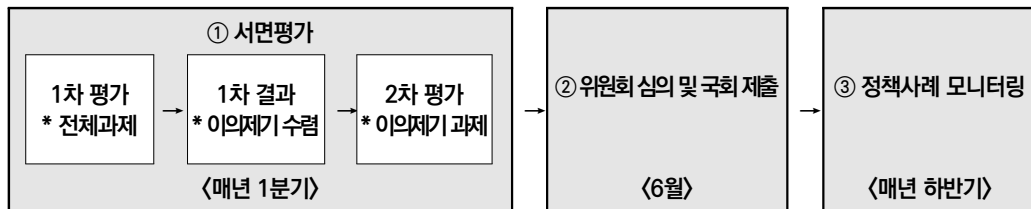
〈2023년 시행계획 점검·평가 대상 제외 과제 목록〉

과제번호	과제명	제외 사유
1-2-1-1	농촌형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시스템 구축	기종료 사업으로 평가대상 과제에서 제외
2-1-2-1	미래형 학교환경 구축 (농어촌 고교 무선망 지원)	
2-1-2-2	농어촌 학교 온라인 화상교실 구축 지원	
2-1-2-8	우수 영어 공교육 프로그램 제공	
2-4-1-3	문화이모작 (문화공동체 촉진인력 양성)	
3-1-1-6	내항 여객선 승선관리 시스템 고도화	
4-1-1-2	수산식품 거점단지 조성	
4-3-1-1	농업법인 취업 지원	
2-3-1-1	농어촌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조성	지방이양으로 예산 집행 및 추진실적 평가 불가
2-3-1-2	농어촌 체육공간 조성	
2-3-1-3	생활문화센터 조성	
3-1-2-1	위험도로 구조 개선	
3-4-3-6	부산물비료공급 친환경농업기반 구축	사업 개편으로 추진실적 측정 불가
4-2-1-5	음식관광 활성화 (음식관광상품 개발 보급)	

❖ 점검·평가 방법

- 시행계획 점검·평가는 서면 평가와 정책사례 모니터링으로 구분된다.
 - **(서면 평가)** 제4차 기본계획 수립 참여 전문가, 분과위원회 민간위원, 각 부처에서 추천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점검·평가단이 각 부처에서 제출한 사업실적을 평가하고 보고서를 작성한다. 각 사업의 추진실적에 대한 서면 평가는 매년 1분기에 진행한다.
 - **(정책사례 모니터링)** 서면 평가 결과에서 정책 성과가 미흡하거나 정책 시의성이 높은 과제를 별도로 선정하여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 추진체계와 성과 또는 부진을 야기한 요인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한다. 서면 평가 결과를 반영한 정책사례 모니터링은 매년 하반기에 수행한다.

〈시행계획 점검·평가 절차〉



- 시행계획 점검·평가의 평가지표는 ‘계획·집행’, ‘정책 성과’, ‘정책 환류’, ‘삶의 질 영향력’의 4개 부문, 총 6개의 평가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 2023년 사업을 추진한 정책 수행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과제 및 개선필요과제를 도출하며, 심층적으로 IPA(Influence-Performance Analysis) 유형에 따른 분석을 위해 삶의 질 영향력 등급을 참고한다.



〈2023년 시행계획 점검·평가 평가지표〉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정책 수행도	1. 계획 집행	1-1. 사업 목표 및 내용 적합성	사업 목적 및 삶의 질 기본계획 간 적합성 농어촌 현실을 고려한 실행방식·추진체계 구축 수준	20점 (기본 12점)
		1-2. 예산 집행 및 일정 관리	예산 계획 대비 집행 수준 사업 일정 준수 정도	20점 (기본 12점)
	2. 정책 성과	2-1. 사업 실적	사업 목표 대비 실적 달성 수준 사업 성과지표 설정 정도	30점 (기본 20점)
		2-2. 사업 효과	삶의 질 개선 효과 창출 정도 정책 효과 검증 객관성 정책 우수사례 도출	20점 (기본 10점)
	3. 정책 환류	3. 정책 개선 노력	제도 개선 노력 정책 수요자 의견 반영 및 참여 수준 사업 범위·규모 확대 노력 정책 홍보 노력	10점 (기본 6점)
점수 총계			100점 (기본 60점)	
삶의 질 영향력	4. 삶의 질 영향력	농어촌 필수서비스 전달 관련성 농어촌의 불리한 여건 개선 사업실행방식 개선을 통한 효과 제고 가능성	5점 척도	

❖ 서면 평가 주요 결과

- 서면 평가에서 정책 수행도 점수가 95점 이상인 과제를 ‘우수과제’로, 80점 미만인 과제를 ‘개선필요과제’로 분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 안건으로 보고하였다.
- 2023년 164개 과제의 정책 수행도 점수 평균은 90.3점으로 전년도에 비해 0.3점 상승하였고, 삶의 질 영향력은 전년도보다 0.1점 하락한 평균 4.0등급으로 평가되었다.
- **(보건·복지)** 38개 과제 중 10개의 우수사례가 도출되었으며, 개선필요과제는 없었다. 정책 수행도 점수 평균은 90.8점, 삶의 질 영향력 평균은 4.3등급으로 타 부문 대비 상대적으로 정책 성과가 양호했다.
- **(교육·문화)** 28개 과제 중 우수과제는 4개, 개선필요과제는 1개였다. 정책 수행도 점수 평균은 90.0점, 삶의 질 영향력 평균은 4.0등급이다.

II. 2023년 주요 추진 업무

- **(정주생활기반)** 63개 과제 중 우수과제는 7개, 개선필요과제는 1개였다. 정책 수행도 점수 평균은 89.6점, 삶의 질 영향력 평균은 3.9등급으로 타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과가 저조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 **(경제·일자리)** 35개 과제 중 우수과제는 12개, 개선필요과제는 2개이며, 정책 수행도 점수 평균은 91.3점, 삶의 질 영향력 평균은 4.1등급이다.
- 전체 164개 과제 중 우수과제 33개, 개선필요과제 4개에 대한 주요 평가의견은 아래와 같다.

<우수과제 및 개선필요과제 주요 평가의견>

과제번호	과제명	수행도	영향력	평가결과	주요 평가의견
4-3-3-7	수산산업 창업·투자 지원 추진	99.3	4.7	우수	생애주기별 창업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사업 성과로 도출
1-3-1-3	농어촌 영유아 돌봄 시설 확대 (농번기 아이돌봄방)	98.7	5.0	우수	돌봄방 운영 인원 기준 완화, 주말 토·일 선택제 도입 등 서비스 참여자의 요구를 반영한 제도 개선 실적 우수
4-1-2-1	푸드플랜 내실화 ① (지역단위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98.7	4.0	우수	지역먹거리 지수 평가를 통해 지자체의 참여를 독려하고 홍보를 통한 국민적 관심 제고에 기여
1-1-2-6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어업안전보건센터운영)	98.7	5.0	우수	사업에서 다년간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근골격계 질환과 어직업과의 연계성을 증명하는 연구를 수행하여 성과를 도출
4-1-2-3	푸드플랜 연계 가공 기초기반 조성 지원	98.7	4.0	우수	시제품 개발, 매출액 증가 등 적절한 사업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지속적인 시제품 개발 및 매출액 향상 등 사업성과를 도출
1-4-2-1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98.0	4.3	우수	민영 기관의 보험사업으로 시행함으로써 농업인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보조를 통해 농업인의 참여를 독려
3-4-2-1	축산 경종 분야 암모니아 관리 강화	98.0	4.0	우수	가축분뇨의 규제·제도 합리화 추진, 액비 이용처 확대 등에 기여
4-4-2-1	농촌 고용인력 지원	98.0	5.0	우수	고령농 포함 지역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지원을 시행하는 등 유효한 현장 지원 수행
4-3-1-5	영농승계 다변화를 통한 청년농업인 양성	98.0	5.0	우수	농식품부, 시도 및 지자체가 연계하여 추진되도록 사업절차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1-4-3-1	농업인 노후안정 농지연금 지원	97.3	4.7	우수	가입요건 완화, 중도 상환 횟수 제한 폐지 및 농지연금 채무상환 방법 확대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
4-3-1-7	유희시설 활용 창업지원	97.3	4.7	우수	지자체 자율성 강화를 위한 사업 추진체계 변경, 지자체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효과 제고



과제번호	과제명	수행도	영향력	평가결과	주요 평가의견
4-4-1-1	농어촌 거주 여성 경제활동 지원	97.3	5.0	우수	사업 목표를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제시하고 달성도 우수
4-3-2-1	귀농귀촌인 창업 주거지원	97.3	4.7	우수	살아보기 등 도시민과 농촌 간 교류 및 이해, 이주를 위한 준비 지원을 준수하게 추진
3-2-2-1	농어촌지역 기초생활인프라 개선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96.7	5.0	우수	사업 추진 절차와 일정, 홍보, 주민 설문조사 등 사업의 정책 환류 노력을 충실히 수행
3-2-2-5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	96.7	5.0	우수	127개 섬 지역 주민이 정책수혜를 받으면서 육지 대비 약 20~30% 더 높은 연료비 절감에 기여
4-1-1-1	농촌융복합사업 활성화 (융복합산업 창업지원 강화)	96.7	5.0	우수	운영 주체에 대한 직접적이고 단계적인 지원을 담고 있으며, 수행 주제 역시 구체적으로 제시
4-3-1-4	아이디어와 기술융합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지원	96.7	4.3	우수	소득 증가 등 사업의 정량적 달성도 우수
2-1-2-6	농어촌 학교 진로교육 강화	96.7	5.0	우수	도서벽지 소재 소규모학교 등 학교 교육 소외지역에 대한 교육복지로서 유의미한 성과
3-4-1-4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개선 ② (연안어장 환경개선)	96.7	4.3	우수	사업 추진 절차와 내용이 비교적 구체적이며, 지원 조건 명시나 수혜자가 명확
1-3-1-2	농어촌 영유아 돌봄 시설 확대 (공동아이돌봄센터)	96.0	5.0	우수	영유아 인구가 감소하고 변화하는 농어촌 환경 조건을 반영하여 사업대상 기준을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 추진
1-4-1-2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96.0	5.0	우수	관계기관 대상 홍보 리플렛 발송, 문자메시지, 온라인 뉴스 게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며 적극 행정 실현
2-1-1-1	농어촌 학교 통학여건 개선	96.0	5.0	우수	중앙농어촌교육지원센터와 농어촌학교 회합 포럼 등 관계자 의견수렴과 정책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
3-1-2-7	해상교통관제구역 확대	96.0	3.7	우수	관계기관 협업, 어업인 교육 및 관제사 사례 중심 교육 강화 등 의견을 수렴하고, 운항자 교육 이행 제고를 통한 안전 의식을 고취
4-1-2-2	푸드플랜 내실화 ②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96.0	4.7	우수	지속적인 직매장 매출액 증가 및 출하 농가 수와 수집 물량 증가 유도
1-1-3-1	농업인 특수건강검진	96.0	4.7	우수	시범사업 단계에서 사업 범위 내 타당한 성과지표 설정
1-4-2-2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개선	96.0	3.7	우수	정책 추진과정에서의 실행방식과 체계를 정책수요자의 요구에 맞추고자 노력
1-4-2-4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 실천 현장 지원	96.0	4.3	우수	농작업 위험 요소 개선 지원, 농업인 안전 실천 교육 홍보 등을 통해 농작업으로 인한 재해 감소에 기여
4-3-3-9	산림일자리발전소 운영 및 확대	96.0	4.7	우수	지역 유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그루경제체 활동 및 판로 지원, 산림자문단을 통한 체계적인 의견수렴 체계 구축

II. 2023년 주요 추진 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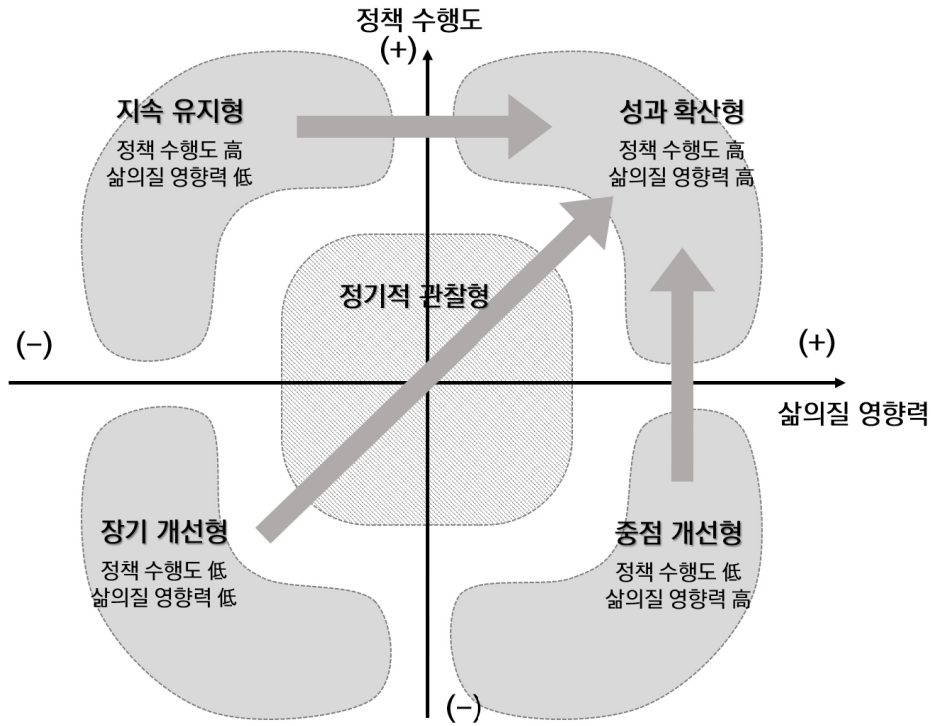
과제번호	과제명	수행도	영향력	평가결과	주요 평가의견
2-2-1-1	농어촌성인문해교육 활성화	95.3	5.0	우수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신규 실시하는 등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문해교육 수요에 대응
1-4-3-3	어업재해보험 품목 확대 (양식어업재해보험 수지 개선)	95.3	3.3	우수	재해를 입은 양식 어가에 보험금 지급으로 어가 경영안정에 기여
2-1-2-3	농어촌 여건에 적합한 다양한 학교 운영 지원	95.3	5.0	우수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통한 교육의 다양성 및 질 제고 등 농어촌 교육 서비스 강화의 사업 효과를 도출
3-2-1-2	취약계층 집 고쳐주기 추진	95.3	4.7	우수	지원 대상은 지자체를 통하여 모집하고, 사업 추진은 복지재단을 통하여 시행하는 방식으로 적절한 실행방식과 추진체계 구성
3-4-3-1	지역단위 농업농촌 환경보전프로그램 도입 확산	95.3	4.0	우수	사업참여자의 인식을 설문조사 하였으며, 여러 마을의 농업 환경보전 우수사례를 제시
4-3-1-2	농업법인 전문인력 채용 지원	79.3	3.0	개선필요	청년층 혹은 중·고령 전문인력 일자리 창출 사업의 목적을 조정하여 사업 재기획 고려 필요
2-3-2-3	찾아가는 박물관 운영	77.3	3.0	개선필요	지역 거점기관의 박물관 특성에 따라 교육 교구재협의 개발 및 활용이 중요
3-4-4-3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76.7	4.3	개선필요	초고령화된 어업인의 비율이 높은 만큼, 스스로 직불금을 신청하기 어려운 어업인의 여건을 고려한 신청 환경 개선 필요
4-1-2-4	수산물 유통체계 개선 ①	74.7	2.7	개선필요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주제 육성 및 역량 강화와 운영·관리 계획 수립 필요

주: 서면 평가 결과 우수과제, 개선필요과제를 정책수행도 점수 순으로 나열함

□ IPA(Influence-Performance Analysis) 분석 결과

- 각 과제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위하여 삶의 질 영향력(Influence)과 정책 수행도(Performance)를 기준으로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 과제 유형을 분류하고, 유형별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 과제 유형별 분류는 각 과제의 영향력과 수행도 값을 표준화한 z점수(z-score)를 기준으로 하며, z점수의 절대값이 1미만일 경우 영향력 및 정책 수행도 측면에서 해당 과제의 특성이 두드러지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 평가 결과를 분류하는 기준을 나타내는 개념도와 유형별 특성은 다음과 같다.

〈IPA 개념도〉



〈각 유형의 항목별 평가 결과 특성〉

유형	과제 수	정책수행도 점수(평균)	삶의 질 영향력 등급(평균)
성과 확산형	28	96.6	4.8
지속 유지형	5	97.5	3.9
장기 개선형	27	84.0	3.0
중점 개선형	10	84.1	4.7
정기적 관찰형	94	90.5	4.1
전체	164	90.3	4.0

주: 세부 평가 결과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발간 「2023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 점검 평가」 보고서에 수록

□ 제4차 기본계획 4대 전략별 평가 결과 및 개선 방안

- 2023년 시행계획 과제의 전략별 추진 내용을 평가하고, 각 전략 부문의 세부 과제에 대한 주요 평가 결과와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 제4차 기본계획 4대 추진 전략 〉

■ 제4차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해 4대 추진 전략을 제시

- 전략 1: (보건·복지)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제공과 포용적 공동체 육성
- 전략 2: (교육·문화) 교육·문화 기회의 형평성 보장
- 전략 3: (정주생활기반) 농어촌다움이 살아 있는 정주기반 구축
- 전략 4: (경제활동·일자리) 경제활동 다각화와 지역순환경제 구축

- 생애 주기별 복지서비스 제공과 포용적 공동체 육성(보건·복지) 전략 부문의 정책 수행도 평균은 90.8점, 삶의 질 영향력 평균은 4.3등급이다.
 - 총 38개 과제 중 성과 확산형으로 분류되는 과제는 10개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장기 개선형과 중점 개선형으로 분류된 과제는 각각 5개, 4개로 전년도보다 감소하였다.
 - 돌봄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의 수요를 반영하여 지원 기준을 완화하는 등 사업개선을 위한 노력이 기울여졌으며, 사회안전망 사업 수혜자의 부담을 덜고 범위를 확대하는 등 사업의 내실화를 이루었다.
 - 응급의료 확충과 돌봄 서비스 제공 등 일부 사업에서 단순히 교부금 지급 방식의 형태를 벗어나, 농어촌 지역의 과소화 및 취약한 접근성을 고려한 사업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
- 교육·문화 기회의 형평성 보장(교육·문화) 전략 부문의 정책 수행도 평균은 90.0점, 삶의 질 영향력 평균은 4.0등급이다.
 - 총 28개 과제 중 성과 확산형으로 분류되는 과제는 4개였으며, 장기 개선형 과제가 7개로 전년도보다 증가하였다. 중점 개선형 과제가 1개, 지속 유지형으로 분류된 과제는 없었다.
 - 원격영상 진로 멘토링을 통한 학생 진로 개발 기여, 시도 교육청별 통학버스 시설 개선 등 공교육 부문에서 농어촌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적 노력이 기울여졌다.



- 반면, 문화 인력 육성, 지역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농어촌 지역 문화 향유 여건이 취약해질 우려가 있어, 관련 사업이 후속으로 연계될 필요가 있다.
- 농어촌다움이 살아있는 정주기반 구축(정주생활기반) 전략 부문의 정책 수행도 평균은 89.6점, 삶의 질 영향력 평균은 3.9등급이다.
 - 총 63개 과제 중 성과 확산형으로 분류된 과제가 3개, 장기 개선형으로 분류된 과제가 9개로, 두 유형에 속하는 과제 수는 전년도보다 감소하였다. 지속 유지형 과제는 2개였으며, 중점 개선형 과제는 5개였다.
 - 지자체가 사업의 주체로서 지원 대상을 파악하고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취약계층과 소외지역 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적절한 추진체계를 바탕으로 양호하게 사업이 추진되었다.
 - 공공임대주택 공급 사업은 성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사후평가를 통해 제도 개선 및 발전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고령 주민의 직불금 신청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 경제활동 다각화와 지역순환경제 구축(경제활동·일자리) 전략 부문의 정책 수행도 평균은 91.3점, 삶의 질 영향력 평균은 4.1등급이다.
 - 총 35개 과제 중 11개 과제가 성과 확산형으로 분류되어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장기 개선형 과제는 전년도보다 줄어 6개이고 중점 개선형 과제는 없었다.
 - 귀농어·귀촌인을 위한 창업 지원과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여성 및 청년 대상 지원을 강화하고 방문형 컨설팅을 수행하는 등 창업지원 과제가 우수한 성과를 도출하였다.
 - 산업 거점 조성사업은 완공된 시설의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차질없이 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주체의 육성 및 역량 강화, 관리 계획 등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 정책사례 모니터링 결과

- 2022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2023년에는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1개 과제에 대한 정책사례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 **(사업 목적·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하여 에너지 취약지역인 산촌 마을에 난방과 전기를 생산·공급하는 에너지자립시스템을 구축한다.
- **(사업 성과)**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이 완료되고 운영이 시작된 마을에서 일자리 및 수익 창출을 실현하고 있다.
 - 2022년까지는 시범 조성 완료 전이었으나, 2023년 조성 완료된 지역(전북 완주·충북 괴산 등)에서 난방비 절감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과를 실현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 **(개선 방향)** ‘소형 열병합발전 모델’이 국내에 처음 도입되는 낯선 방식임에 따라 사업사 선정 및 시공 과정에서 일부 차질이 발생한 사례가 있으며, 주민 수용성과 환경 영향 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 2022년 9월 30일 공법 선정 회의 및 전문가 자문 추진(경기 양평)
 - 2022년 11월 30일 공법 선정 회의 추진(충북 괴산)
- **(현장 모니터링 사례 및 시사점)** 사업 설계 단계와 실제 추진 단계 간 오차 발생을 방지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산림 및 에너지 분야 전문가 및 담당자의 폭넓은 참여와 충분한 주민 공청회를 통한 이해관계자 간 소통 절차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2. 농어촌 영향평가

❖ 제도 개요

- 농어촌 영향평가제도는 「농어업인삶의질법」 제45조에 따라 정부 부처의 계획·정책·사업 등이 농어촌에 미치는 불리한 영향을 점검·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조정 제도이다.
 -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정책 또는 사업 추진 시 교통 접근성 및 사회기반시설, 서비스 전달이 열악한 농어촌 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농어촌에 도시 대비 불리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주요 정책·사업이 농어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자 농어촌 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되었다.

농어업인삶의질법 제45조(농어촌에 대한 영향평가)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 및 소관 중요 정책이 농어촌지역의 경제·사회·문화·환경 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16조(정책등의 분석·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5조 2항에 따라 정책등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침을 제정할 때에는 분석·평가의 주제, 방향, 절차, 대상 정책 등 세부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2023년 농어촌 영향평가 대상 과제는 총 2개로, ‘농어촌 주민의 난방·에너지 비용 경감’과 ‘도서지역 해상교통환경 개선’이다.
 - ‘농어촌 주민의 난방·에너지 비용 경감’ 과제는 농어촌 지역의 높은 개별난방시설 의존도와 유가 상승 등에 의한 난방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 대응하여, 도·농 간 격차를 파악하고 도시가스 및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등 관련 정책의 효과 평가를 위해 선정되었다.
 - ‘도서지역 해상교통환경 개선’ 과제는 도서 주민의 해상교통 접근성이 매우 열악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도서지역 교통 여건 개선안을 도출하고자 선정되었고, 본 영향평가는 전문지원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수행하였다.

1.2.1. 농어촌 주민의 난방·에너지 비용 경감

❖ 현황

▣ 농어촌 지역의 난방·에너지 여건

- 농어촌 지역은 도시 지역에 비해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난방·에너지 공급을 위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이 매우 열악하다.
 - 도시 지역의 도시가스 및 지역난방 사용 비율은 91.7%인 반면, 농어촌 지역은 42.8%에 불과하다. 특히 농어촌 지역 내에서도 읍 지역은 69.4%인 것에 비해 면 지역은 16.7%로 집단에너지 이용 비율이 매우 낮다.

〈주택 난방설비 이용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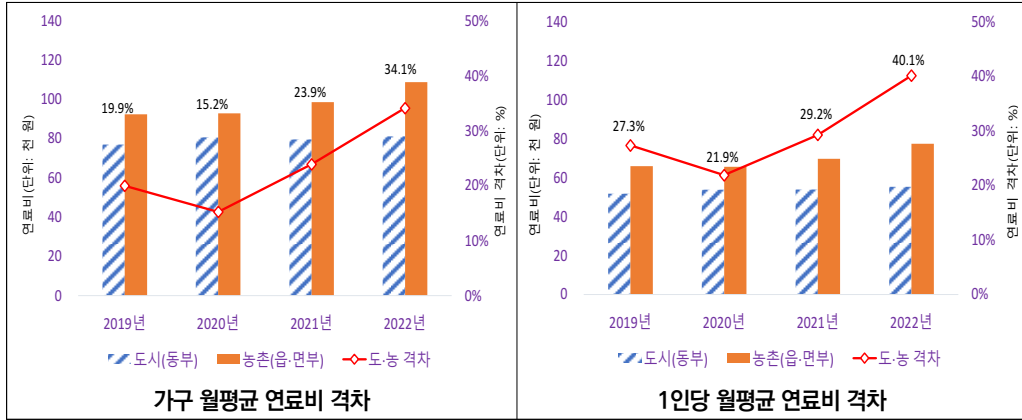
지역 구분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프로판가스	전기	
도시(동부)	77.2	14.5	3.7	1.3	0.9	
농어촌	전체	41.6	1.2	36.1	4.5	11.0
	읍부	67.4	2.0	20.6	4.1	3.2
	면부	16.3	0.4	51.2	4.9	18.6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2023), 11차가구에너지패널조사.

- 집단에너지 접근성 차이로 인해 유가 상승 및 환율 변동 등으로 인한 연료비 상승이 농어촌 가구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 2022년 농어촌 가구의 월평균 연료비는 108,644원으로 도시 가구의 월평균 연료비인 81,037원에 비해 약 27,607원(34.1%) 더 높았으며, 최근 4년간 평균 23.3%의 도·농간 월평균 연료비 격차가 나타났다.
 - OECD 균등화 방법을 적용한 1인당 월평균 연료비의 도·농 간 격차는 40.1% 까지 더 확대되어 농어촌 지역 1인 가구의 연료비 부담이 매우 높았다.



〈도·농간 가구 및 1인당 연료비 격차〉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019~2022). 검색일: 2023.10.20.

- 농어촌 지역의 2021년 대비 2022년의 연료비 증감률은 약 10.6%로 도시 지역의 연료비 증감률인 2.1%보다 8.5%p 높아 유가 상승에 따른 부담이 더 크게 작용하였다.

〈전년 대비 연료비 증감률〉

구분	농어촌				도시			
	2020	2021	2022	연평균	2020	2021	2022	연평균
전년 대비 연료비 증감률(%)	1.0	5.1	10.6	5.6	3.9	-0.6	2.1	1.8

주: 연료비 증감률은 {(해당연도 연료비 - 전년도 연료비)/전년도 연료비*100}으로 산출함.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019~2022). 검색일: 2023.10.20.

□ 정책 추진 상황

- 산업통상자원부는 ‘도시가스공급배관사업’ 및 ‘LPG 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을 통해 집단에너지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저비용 에너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배관망 설치 및 사용자시설 등을 지원하여 농어촌 에너지 취약지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II. 2023년 주요 추진 업무

- 2022년 ‘도시가스공급배관사업’을 통해 농어촌 지역 2.5만 가구에 도시가스가 신규로 보급되었으며,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에는 ‘LPG 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을 통해 36개 마을, 2,296가구에 도시가스 수준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가진 LPG 소형저장탱크를 공급했다.

〈제4차 기본계획 기간 중 연차별 예산 투입 및 실적〉

사업	연도	예산 투입(백만 원)	사업 실적
도시가스공급 배관사업	2020년	35,000	신규 41만 가구(농어촌 2.6만 가구)
	2021년	30,000	신규 40만 가구(농어촌 2.0만 가구)
	2022년	27,000	신규 43만 가구(농어촌 2.5만 가구)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2020년	8,700	26개소 보급(계획 대비 100%)
	2021년	18,060	44개소 보급(계획 대비 146%)
	2022년	16,200	36개소 보급(계획 대비 100%)

주: ‘LPG 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의 예산은 국비, 지방비, 기타 예산의 총 금액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2020~2022).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실적 제출 자료.

- ‘도시가스공급배관사업’은 농어촌서비스기준 목표치(읍부 도시가스 보급률 68%)를 달성하였으며, 농어촌 지역 도시가스 보급 확대로 농어촌 주민의 에너지 접근성 개선 및 연료비 부담 완화에 기여하였다.
 -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신규 공급배관 지원을 계속 추진하여, 2022년 기준 도시가스 보급률은 전국 84.7%, 읍 지역 72.7%까지 확대되었다.
- LPG 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은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에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및 배관망 설치를 지원하여 농어촌 지역의 에너지 접근성 및 편의성 개선, 연료비 부담 완화에 기여하였다.
 - 2022년 기준 누적 300개소 마을, 14,688가구에 배관망 및 사용자시설 설치를 지원하였다. 다만, 농어촌 지역의 높은 수요와 에너지 취약지역 규모에 비해 사업 규모가 부족하여 사업 경쟁률이 12:1로 높은 만큼 사업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



❖ 정책 개선 방안

□ 에너지 취약지역 해소를 위한 농어촌 별도 성과지표 병행

- 개별난방 사용 비율이 높은 농어촌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집단에너지 공급 등 에너지 취약지역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의 병행이 필요하다.
 - ‘도시가스공급배관사업’의 경우 ‘전국 도시가스 공급 가구 수’를 성과지표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농어촌 지역에 대한 별도의 성과지표를 병행 관리하고 농어촌 지역 도시가스 사각지대에 초점을 맞춘 별도 모니터링 및 성과 관리가 필요하다.
 - ‘LPG 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의 경우 성과의 질적 관리를 위해 ‘연료비 절감률(%)’로 성과지표가 설정되었다. 그러나 LPG 소형저장탱크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므로 에너지 취약지역 개선 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농어촌 지역에 초점을 맞춘 양적 지표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정책 성과지표 개선 제안〉

도시가스배관공급사업	성과지표	도시가스 공급 가구 수(백만)
	병행지표	농어촌 지역(읍·면) 도시가스 공급 가구 수
LPG 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	성과지표	연료비 절감률(%)
	병행지표	농어촌 마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실적(마을 및 세대 수)

□ 사업 규모 확대 및 통합관리체계 구축

- 도시가스 등 집단에너지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 지역 소규모 마을의 연료비 절감 및 에너지 접근성 향상을 위해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의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
 -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도시가스 등 집단에너지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서 수요가 높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규모가 부족하다.
 - 농어촌 마을의 사업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 대상 및 예산 규모가 확대되어야 한다.

II. 2023년 주요 추진 업무

- 농어촌 주민의 난방 여건 개선을 위해 산업부 외 타 부처에서 추진 중인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에 대한 통합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난방 및 주거 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업으로써 산업부 외 행안부, 국토부, 지자체 등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
 - 삶의 질 위원회 차원에서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규모를 파악하여 농어촌 지역의 전체적인 현황 및 실적 관리를 통해 농어촌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 난방효율개선 사업과의 연계

- 농어촌 지역의 실질적인 난방비 절감과 도·농 간 난방비 격차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접근성 제고와 함께 주택 난방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후주택 및 불량주택 단열성능 개선 등의 사업과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 농어촌 주민의 난방비 부담이 도시 주민에 비해 큰 이유는 고효율·저비용 난방 연료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것도 있지만, 농어촌 주택의 단열·난방 성능 및 주택 형태가 도시에 비해 크게 열악한 점도 있다.
 - 난방비 절감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서는 주택의 난방효율 개선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고효율 친환경 난방설비 교체, 주택 단열 보강, 창틀 교체 등 현행 집고치기 사업을 함께 추진하여 에너지 접근성 및 난방 효율 개선을 통한 연료비 절감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1.2.2. 도서 지역 해상교통환경 개선

❖ 현황

□ 도서 지역 해상교통환경 여건

- 2022년 12월 기준, 전국에는 156척의 연안여객선이 101개의 항로를 운행하고 있다.
 - 지방청별 연안여객선 현황을 살펴보면, 목포, 인천, 마산, 여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항로를 보유하고 있고 이에 따른 운행 여객선 수와 업체 수가 많아 해상교통이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이다.
- * 상위 지역 항로 수 및 운행 여객선 수: 목포(39개/65척), 인천(14개/22척), 마산(13개/23척), 여수(13개/16척)

〈지방청별 연안여객선 현황〉

구분	항로 수	운행 여객선 수	업체 수
부산	1	0	1
인천	14	22	8
여수	13	16	9
마산	13	23	11
동해	2	3	2
군산	4	5	3
목포	39	65	20
포항	4	5	6
대산	7	8	2
제주	4	9	4
합계	101	156	66(58)

주 : 괄호는 중복업체를 제외한 업체 수.

자료: 한국해운조합, 2023년도 연안여객선 업체 현황, 2023, p.4.

- 중소 선사가 많아 노후 중고선이 많고, 다른 대중교통에 비해 영업실적이 저조하지만, 대체 교통수단이 없는 독·과점 시장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 54개 선사가 103개 항로·155척을 운행하고 있는데 이중, 19개 선사(35.2%)가 영업실적이 10억 원인 미만인 중소 선사이다.
- * 일반항로 74개(127척 운항), 보조항로 29개(28척 운항)

II. 2023년 주요 추진 업무

- 도서 주민의 육지 왕래와 사무를 위해 운송수단이 필수적인 지역이 많아 연안여객선 156척 중 66.7%가 차도선으로 활용되고 있다.

〈2022년 선종별 연안여객선 현황〉

선종	척수	세 부 내 역	
일반선	13	항해 속력이 15노트 미만인 여객선	
고속선	0	항해속력이 15노트 이상 20노트 미만인 여객선	
쾌속선	9	항해속력이 20노트 이상 35노트 미만인 여객선	
초쾌속선	15	항해속력이 35노트 이상인 여객선	
차도선	104	차량을 육상교통 등에 이용되는 상태로 적재 운송할 수 있는 선박으로 차량구역이 폐위되지 아니한 선박	
카페리	쾌속 카페리	3	폐위된 차량구역에 차량을 육상교통 등에 이용되는 상태로 적재운송할 수 있는 선박으로서 운항속도가 시속 25노트 이상인 여객선
	일반 카페리	12	폐위 차량구역에 차량을 육상교통 등에 이용되는 상태로 적재운송할 수 있는 선박으로서 운항속도가 시속 25노트 미만인 선박

자료: 한국해운조합, 2023년도 연안여객선 업체 현황, 2023, p.5.

〈여객 운송 사업 총매출 및 업체 평균 매출액 비교('19)〉

구분	업체수(개)	매출액(억 원)	업체 평균 매출액(억 원)
시외버스	70	15,817	226
고속버스	8	6,829	853
연안여객	59	3,310	59
정기항공	27	214,380	7,940

자료: 해양수산부, 제2차 연안여객선 현대화계획(2021~2025).



□ 정책 추진 상황

- 도서 지역 해상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준공영제 확대 지원 및 내항 여객선 운임 보조 사업을 매년 꾸준히 늘리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 2023년 예산인 30,552백만 원을 투입하여 11개 항로를 지원하였으며, 섬 주민의 운임 부담을 현행 대비 50% 경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제4차 기본계획 기간 도서 지역 해상교통환경 개선 관련 예산 투입 대비 실적(’20~’24)〉

연도	예산 투입		사업 실적 (지원항로 수, 보조금 집행률)
	계획(백만 원)	집행(백만 원)	
2020년	31,203	31,154	15개 항로 지원, 집행률 99.8% 달성
2021년	36,590	36,539	44개 항로 지원, 집행률 99.9% 달성 * 코로나 한시적 지원 33개사 50억 원 포함
2022년	36,680	36,595	41개 항로 지원, 집행률 99.8% 달성 * 코로나 한시적 지원 33개사 50억 원 포함
2023년	30,552	27,352	11개 항로 지원, 집행률 99.5% 달성 소외도서 항로 10개소 선정 및 지원
2024년	30,652	-	12개 항로 선정, 소외도서항로 10개소 선정추진 * 기존 10개소 지속 지원(총 20개소)

주: 예산투입 및 집행액은 도서 지역 해상교통환경 개선 세부 사업 기준이며, '24년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자료: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국고보조사업 시행지침서(2021; 2022; 2023).

- 민간 선사 운항결손액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도서 지역의 항로 단절을 방지하고, 섬 주민 운행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이동권 보장과 정주 여건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 섬 주민당 최대 7천 원 운임 부담 지원 및 미취학 아동 운임지원 확대로 연간 6만 명이 여객선을 무상으로 이용 중이다.

II. 2023년 주요 추진 업무

<정책 성과지표 및 연차별 목표 달성 수준 계획>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구분	목표					자료 수집방법 및 출처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① 지원항로 수	1 (정량)	목표	14	14	20	11	12	관련 공문
		실적	15	44	41	11	14	
		달성률	107	314	205	100	117	
② 보조금 집행률(%)	1 (정량)	목표	100	100	100	100	107	관련 공문
		실적	99.8	99.9	99.5	99.5	100	
		달성률	99.8	99.9	99.5	99.5	99.8	
측정산식(측정방법)	① 지원항로 수(관련 공문) ② 지자체 보조금 교부금액 / 예산액 × 100							
목표치 산출 근거	① 최근 3년간 지원항로 수 평균 ② 지자체별 도서민 운임지원 재정투입 규모 반영							

자료: 해양수산부 부처 제출 자료(2021; 2022; 2023).

- 하지만 자금조달, 해상여건 변화, 전략 부족 등으로 인해 채산성 낮은 선사의 경영 악화·업종 전환·폐업 축진이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 독·과점 영세 시장구조와 낮은 채산성, 해상교통 여건 변화(도서 인구 감소, 유가 상승, 연륙 도서 증가 등)가 민간 선사의 경영난 악화를 촉진하므로 신규 수익이나 수요 창출 등 중장기적 성장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 또한 정부 정책사업 추진과 지원에도 불구하고 정책효과 검증의 객관성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 정량적 성과지표로 정책에 대한 현장 체감도 파악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어 수요자 중심의 성과지표를 보조지표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



❖ 정책 개선 방안

□ 중장기 성장전략 마련 및 보조지표 검토

- 해상교통 연계 상품 개발, 준공영제 활성화 방안 등 수요에 맞는 핀셋형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여객선 운항 테마관광 상품, 여객선·도선 환승할인 및 교통카드 적용 등 도서 관광객과 해상교통 기능 연계, 관광콘텐츠 개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 운항결손금 지원 범위 확대뿐만 아니라 운항 활성화 방안 마련, 도서 주민 수요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
 - * '섬-육지-섬' 항로, 생활권 도서 순회 항로, 야간 전용 운항 항로, 복수 시·군 생활권 도서 연계 상품 등
- 해상교통환경 개선 정책이 실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성과가 있었는지 평가할 수 있는 보조지표 마련을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
 - 운임 보조 지원을 받는 주민 대상으로 해상교통 여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에 따른 주민 만족도 보조지표를 활용해 정책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에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
 - 또한 운항결손금 지원 선사의 경영 수지 변화, 지자체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평가하는 보조지표 검토가 필요하다.
 - * 선사 채산성, 항로 단절 방지 지자체-선사-주민 협의회 개최 수 등



2. 조사·연구

2.1. 2023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 점검·분석

2.2. 농어촌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2.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심층연구

2.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 우수사례집 발간

2.1. 2023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 점검·분석

❖ 제도 개요

- 농어촌서비스기준은 국가최소기준(National Minimum Standard) 관점에서 농어촌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공공서비스 항목과 수준으로 정부에서 설정하고 관리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 삶의 질 향상 위원회에서 도·농 간 생활 격차 완화 및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목적으로 2010년에 도입하였고, 사회적 여건을 반영하여 수정되었다.
*(11)8대부문31개항목→(13)9대부문32개항목→(15)7대부문17개항목→(21)4대부문19개항목
 - 「농어업인삶의질법」 제44조를 법적 근거로 하며, 농어촌서비스기준의 항목 및 목표치 등 세부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고시에 명시한다.
 - 보건의료·복지, 교육·문화, 정주여건, 경제활동의 4대 부문 19개 항목을 제시하고, 매년 이행실태를 측정한다.
 - 관계 부처·청 담당자 및 부문별 전문가, 농어업인 등으로 구성된 민·관 및 범부처 협의체로서 ‘농어촌서비스기준협의회’를 운영한다.
 - 농어촌서비스기준협의회는 공공서비스 항목 및 목표치 설정, 달성 정도의 점검·평가, 제도 개선 등 운용 전반에 필요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문기구이다.
- 제4차 기본계획(20-’24) 수립 시 항목 신설 및 목표치 설정, 분석 방법 변경 등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를 개편하였다.
 -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 및 국가적 생활SOC 확충 기조에 따라 체육시설, 도서관, 생활폐기물 항목 등 3개 항목을 신설하였다.
 - 국토교통부 기초생활인프라 기준에 착안해 진료, 영유아 보육·교육, 도서관, 초·중등교육, 문화, 체육시설 등 6개 항목에 대해 접근성 분석 방식을 도입하였다.



❖ 2023 농어촌서비스기준 주요 내용

- 제4차 기본계획('20-'24) 수립 시 개편된 현행 농어촌서비스기준은 보건의료·복지, 교육·문화, 정주여건, 경제활동의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별 중기 목표치를 설정하고, 매년 139개 농어촌지역에 대해 달성 정도를 측정한다.
 - * 중기 목표치란, 제4차 기본계획('20-'24) 기간에 걸쳐 달성해야 하는 최종 목표치를 의미
- 2023년 농어촌서비스기준은 공식통계자료(10개)와 부처협조자료(10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 자료(5개)와 민간업체 협조자료(1개)를 활용한다.
 - 자료 수집 시점(2023년 9월~12월 중) 기준 구득 가능한 최신 자료를 활용한다.
- 농어촌서비스기준 4대 부문 19개 항목 중 2020년 기준 11개 달성(8개 미달성)에서 2023년 기준 14개 달성(5개 미달성)하여 달성 정도가 개선되었다.
 - 보건의료·복지, 교육·문화, 경제활동 부문의 모든 항목이 목표치를 달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달성도가 개선되었다.
 - * 목표치 달성항목: ('20) 11개 → ('21) 12개 → ('22) 12개 → ('23) 14개
 - 정주여건 부문은 9개 항목 중 5개 항목이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여 상대적으로 부진하나, 미달성 항목(5개) 중 소방출동을 제외한 4개 항목에서 달성도가 개선되었다.

II. 2023년 주요 추진 업무

<농어촌서비스기준 점검 방법 및 자료>

부문	항목	세부항목	점검 방법	점검 자료	자료
1. 보건·의료·복지	진료	내과	농어촌 주민 거주지에서 4대 중요 과목에 해당하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진료가 가능한 인접 의료기관까지 차량으로 소요되는 평균 접근 시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소 데이터	공식 통계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료	-	시·군별 119 구급대 현장 도착 평균 소요시간	소방청: 소방서별 119구급대 출동 소요 시간 현황	협조 자료
	영유아 보육·교육	어린이집	농어촌 주민 거주지에서 인접한 국공립·민간 어린이집 및 유치원시설까지 차량으로 소요되는 평균 접근 시간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국공립·민간 어린이집 주소 현황 자료	협조 자료
		유치원	교육통계서비스: 유치중등 및 고등교육 기관 주소록	공식 통계	
	노인복지	-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수+재가노인지원서비스 이용자 수+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 수) / (65세 이상 노인인구)}×100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주요 통계	공식 통계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 현황	공식 통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혜자 현황	지자체 행정 조사
행정안전부: 65세 이상 노인인구				공식 통계	
2. 교육·문화	초·중등교육	-	농어촌 주민 거주지에서 인접한 초·중학교까지 차량으로 소요되는 평균 접근 시간	교육통계서비스: 초·중학교 주소록	공식 통계
	평생교육	-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읍·면 수 / 총 읍·면 수)×100	비형식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읍·면 현황	지자체 행정 조사
	문화	문화예술 회관 및 지방 문화원	농어촌 주민 거주지에서 인접한 문화회관까지 차량으로 소요되는 평균 접근 시간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기반시설총량): 시·군별 문화예술회관 및 지방문화원 현황	공식 통계
	도서관	도서관	농어촌 주민 거주지에서 인접한 작은 도서관, 공공도서관시설까지 차량으로 소요되는 평균 접근 시간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공식 통계
	체육시설	-	농어촌 주민 거주지에서 인접한 체육시설까지 차량으로 소요되는 평균 접근 시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및 체육진흥관리공단: 공공체육시설(경기장, 체육관, 수영장) 및 생활체육시설(체육도장, 체력단련장, 간이운동장) 주소	협조 자료



(계속)

부문	항목	세부항목	점검 방법	점검 자료	자료
3. 정주 여건	주택	석면 슬레이트 주택	{('14년부터 '21년까지의 슬레이트 주택 철거 실적)/ '14년 슬레이트 주택 수}×100	환경부: 슬레이트 철거 실적 - 주택 철거 처리 분야	협조 자료
	상수도	-	(시·군별 면 지역 지방 및 광역 상수도 급수인구 / 시·군별 면 지역 주민등록 인구)×100	환경부: 상수도 통계	공식 통계
	하수도	-	(군 지역별 공공하수처리 인구 / 군 지역별 인구)×100	환경부: 하수도 통계	공식 통계
	난방	-	(읍내 도시가스 보급 가구 수 / 읍 전체 가구 수)×100	산업통상자원부(도시가스협회): 도시가스 보급 가구 현황	협조 자료
			{소형LPG저장탱크 공급마을 가구 수 / (읍·면 지역 총 가구 수 - 읍·면 지역 도시가스 보급 가구)}×100	산업통상자원부 (한국LPG산업협회)	협조 자료
	대중교통	-	(도보 15분내 정류장에서 하루 버스 운행 3회 이상인 법정리 수 / 총 법정리 수)×100	대중교통 버스노선 정보 (㈜아로정보기술)	민간 기업 자료
			도서 지역 여객선 운항 현황	해양수산부: 도서별 여객선 이용실적	협조 자료
	생활폐기물	영농폐기물 처리장	(영농폐기물 집하장이 있는 읍·면 수 / 총 읍·면 수)×100	환경부: 공동집하장 현황	협조 자료
		생활폐기물 처리장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이 있는 행정리 수 / 총 행정리 수)×100	행정리별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및 영농 폐기물 집하장 설치 현황	지자체 행정 조사
방법설비	-	(방법용 CCTV 설치 행정리 수 / 총 행정리 수)×100	방법용 CCTV 설치 현황	지자체 행정 조사	
경찰순찰	-	주민이 요청하는 순찰시간·장소에 대해 1일 1회 이상 탄력순찰 여부	경찰청: 시·군별 탄력순찰 대상 지역 및 탄력순찰 실시 현황	협조 자료	
소방출동	-	(시·군별 목표시간내 도착 건수 / 총 출동 건수)×100	소방청: 각 시·군별 화재 발생 장소 및 출동거리	협조 자료	
4. 경제 활동	창업 취업 컨설팅 교육	-	시·군별 사업체 창업·취업에 관한 컨설팅·교육 지원 프로그램 운영 여부	① 창업지원센터 유무 ② 일자리지원센터 유무 ③ 전담인력 고용 여부 ④ 전문프로그램 운영 횟수	지자체 행정 조사

❖ 2023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 점검·분석 결과

- 2023년 기준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를 분석한 결과, 4대 부문 총 19개 항목 중 목표치 달성 항목 수는 14개이며, 미달성 항목은 5개로 조사되었다.
 - 2022년 대비 하수도 및 창·취업 컨설팅교육 등 달성 항목이 2개 추가되었고, 전년도 수치와 비교 시 15개 항목은 상승, 2개 항목(방법설비, 소방출동)은 하락, 2개 항목(영유아 보육·교육, 노인복지)은 유지하였다.

□ 보건의료·복지 부문 (4개 항목)

- 보건의료·복지 부문의 4개 항목 모두 목표치를 달성하였다.
- 진료 항목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4개 진료과목의 평균 접근 시간이 평균 22.7분으로 전년 대비('22년 23.1분) 0.4분 줄어들었다. 진료과목별로 살펴보면, 내과 18.4분, 외과 21.8분, 소아청소년과 25.7분, 산부인과 24.8분으로, 4개 진료과목 모두 목표치(30분~1시간)를 달성하였다.
 - 당초 세부 진료과목에 따라 목표 시간이 상이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목표치를 30분~1시간으로 설정하였으나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하여 일괄 30분으로 점검하였다.
- 응급의료 항목은 119구급대 현장 도착 소요시간이 평균 12.1분으로 나타나 목표치(30분)를 달성하였고, 전년 대비('22년 13.8분) 1.7분 감소하여 달성 정도가 향상되었다.
- 영유아 보육·교육 항목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평균 접근시간이 9.1분으로 목표치(20분)를 달성하였고 전년도와 동일하였다.
- 노인복지 항목은 농어촌 시·군 100%가 독립적 일상생활에 제한이 있는 저소득 노인가구에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목표치(80%)를 달성하였고, 전년과 달성 정도를 유지하였다.



□ 교육·문화 부문 (5개 항목)

- 교육·문화 부문의 5개 항목 모두 목표치를 달성하였다.
- 초·중등교육 항목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평균 접근 시간이 7.3분으로 목표치(10분)를 달성하였고, 전년('22년 7.4분)보다 접근시간이 0.1분 줄어 달성 정도가 소폭 개선되었다.
- 평생교육 항목은 평생교육시설(주민자치센터 포함)을 운영하는 읍·면 비율이 85.6%로 목표치(70%)를 충족하였고, 전년 대비('22년 84.6%) 달성 정도가 향상되었다.
- 문화 항목은 문화예술회관, 지방문화원까지의 접근 시간이 평균 24.0분으로 목표치(40분)를 달성하였고, 전년('22년 24.1분)보다 접근시간이 0.1분 줄어들어 달성 정도가 소폭 개선되었다.
- 도서관 항목은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까지의 접근 시간이 9.7분으로 목표치(10분)를 달성하였으며, 전년('22년 10.0분)보다 0.3분 감소해 달성 정도가 개선되었다.
- 체육시설 항목은 체육관 및 경기장 등 생활체육시설까지의 평균 접근시간이 15.8분으로 목표치(30분)를 달성하였고, 전년('22년 16.6분)보다 0.8분 단축되어 달성 정도가 향상되었다.

□ 정주여건 부문 (9개 항목)

- 주택, 난방, 방범설비, 하수도 등 4개 항목은 목표치를 달성하고, 상수도, 대중교통, 생활폐기물, 경찰순찰, 소방출동 등 5개 항목은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 주택 항목은 석면 소재 슬레이트 주택 수가 2014년 대비 38.4% 감소하여 목표치(23%)를 초과 달성하였으며, 전년 대비('22년 34.8%) 3.6%p 향상되었다.
 - 2015년 통계청 주택총조사 방식의 변경(전수조사→표본조사)으로 최저주거기준 이상의 주택에 대한 조사는 가능한 통계자료가 없어 측정이 불가했다.
- 난방 항목은 읍 지역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72.7%로 목표치(68%)를 달성하였고, 전년('22년 70.0%)보다 2.7%p 상승하였다.

II. 2023년 주요 추진 업무

- 방법설비 항목은 방법설비용 CCTV 설치 행정리 비율이 75.4%로 목표치(60%)는 달성하였으나, 전년 대비('22년 75.9%) 0.5%p 하락하였다.
- 하수도 항목은 군 지역의 하수도 보급률이 76.6%로 목표치(76%)를 달성하였고, 전년('22년 75.6%)보다 1%p 향상되었다.
- 상수도 항목은 면 지역의 광역·지방상수도 보급률이 82.8%로 목표치(85%)에는 미달하나 전년('22년 81.6%)보다 1.2%p 향상되었다.
- 대중교통 항목은 하루 3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한 법정리 비율이 89.2%로 목표치(100%)에 미달하였으나 전년('22년 89.1%)보다 0.1%p 상승하였다.
- 생활폐기물 항목 중 영농폐기물의 경우 영농폐기물집하장이 설치되어 있는 읍·면 비율이 80.7%로 전년('22년 76.9%)보다 3.8%p 향상, 생활폐기물의 경우에는 생활폐기물처리장이 있는 행정리 비율이 26.7%로, 전년('22년 20.6%)보다 6.1%p 향상되었으나 모두 목표치(100%)는 달성하지는 못하였다.
- 경찰순찰 항목은 탄력순찰 실시율이 98.2%로 목표치(100%)에는 미달하였으나, 전년('22년 95.4%)보다 2.8%p 상승해 달성 정도가 개선되었다.
- 소방출동 항목은 화재발생 신고 접수 후 지역별 목표시간 내 현장 도착 비율이 58.4%로 목표치(70%)에 미달하였으며, 전년 대비('22년 69.1%) 10.7%p 하락하였다.

□ 경제활동 부문 (1개 항목)

- 경제활동 부문의 1개 항목은 목표치를 달성하였다.
- 창업 및 취업 컨설팅 교육 항목은 농어촌 시·군 중 연 1회 이상 취업·창업 관련 컨설팅 또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군 비율이 87.1%로 목표치(86%)를 달성하였고, 전년('22년 77.5%)보다 9.6%p 상승하였다.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현황('20~'23년)〉

부문	서비스 항목	국가최소기준	목표치 (분, %)	'20년	'21년	'22년	'23년
보건의료 · 복지	진료	차량을 이용하여 30분~1시간 이내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진료가 가능하다.	30분 ~1시간	23.3분	22.7분	23.1분	22.7분 (0.4분 ↓)
	응급의료	응급환자 발생 시 기본적인 응급장비가 마련되고 전문인력이 동승한 구급차가 30분 이내 도착하여 응급처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30분	20.5분	14.6분	13.8분	12.1분 (1.7분 ↓)
	영유아보육· 교육	차량을 이용하여 20분 이내로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공립·민간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할 수 있다.	20분	5.8분	9.0분	9.1분	9.1분 (-)
	노인복지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방문요양·돌봄 등의 서비스 및 같은 법 제3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가노인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비율을 80% 이상으로 한다.	80%	99.3%	100%	100%	100% (-)
교육· 문화	초·중등교육	차량을 이용하여 10분 이내에 농어촌 초등학교·중학교에 도달할 수 있다. 지역여건에 맞는 농어촌 초등학교·중학교를 육성하고 통학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적절한 통학수단을 제공한다.	10분	7.5분	7.3분	7.4분	7.3분 (0.1분 ↓)
	평생교육	읍 면내에서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또는 같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설치·지정된 평생학습센터에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비율을 70% 이상으로 한다.	70%	88.2%	79.1%	84.6%	85.6% (1.0%p▲)
	문화	차량을 이용하여 40분 이내에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문화원에 도달할 수 있으며, 월 1회 이상 문화프로그램과 분기별 1회 이상 전문 공연 프로그램을 관람할 수 있다.	40분	24.7분	24.0분	24.1분	24.0분 (0.1분 ↓)
	도서관	차량을 이용하여 10분 이내에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공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	10분	10.3분	9.9분	10.0분	9.7분 (0.3분 ↓)
	체육시설	차량을 이용하여 30분 이내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30분	18.8분	17.0분	16.6분	15.8분 (0.8분 ↓)
	정주여건	주택	주민 누구나 「주거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공고한 최저주거기준에 적합한 주택에서 거주한다. 슬레이트(석면이 포함된)가 사용된 주택 지붕의 철거개량 비율을 23% 이상으로 한다.	23%	7.8%	30.7%	34.8%
상수도		면 지역 상수도 보급률을 85% 이상으로 한다.	85%	77.0%	80.6%	81.6%	82.8% (1.2%p▲)

II. 2023년 주요 추진 업무

(계속)

부문	서비스 항목	국가최소기준	목표치 (분, %)	'20년	'21년	'22년	'23년
정주여건	하수도	군 지역 하수도 보급률을 76% 이상으로 한다.	76%	73.3%	74.6%	75.6%	76.6% (1.0%p▲)
	난방	읍지역 도시가스 주택보급률을 68% 이상으로 한다.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엘피지(LPG) 소형저장탱크를 활용하여 가스 보급을 확대한다.	68%	68.1%	69.4%	70.0%	72.7% (2.7%p▲)
	대중교통	행정리 내에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대중교통수단(이하 “대중교통수단”이라 한다)을 3회 이상 이용할 수 있다. 수요 부족으로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이 어려운 지역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도입한다. 도서지역의 경우 모든 본섬에 「선박안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여객선이 1일 왕복 1회 이상 운항된다.	100%	87.1%	87.3%	89.1%	89.2% (0.1%p▲)
	생활폐기물	행정리내에서 영농·생활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할 수 있다.	(영농) 100%	66.4%	75.2%	76.9%	80.7% (3.8%p▲)
			(생활) 100%	16.7%	18.8%	20.6%	26.7% (6.1%p▲)
	방법설비	범죄 예방을 위해 마을 주요지점과 주요 진입로의 방범용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율을 60% 이상으로 한다.	60%	64.9%	71.3%	75.9%	75.4% (0.5%p▽)
	경찰순찰	지역주민이 요청하는 장소·시간에 대하여 탄력적인 방식의 순찰을 1일 1회 이상 실시한다.	100%	62.9%	90.8%	95.4%	98.2% (2.8%p▲)
소방출동	화재 발생 신고 접수 후 소방차가 지역별 목표 시간 내에 현장에 도착하는 비율을 70% 이상으로 한다.	70%	72.1%	65.0%	69.1%	58.4% (10.7%p▽)	
경제활동	창업·취업 컨설팅교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창업·취업 관련 지원센터에서 사업체 창업·취업에 관한 전문적인 컨설팅 또는 교육서비스를 1년 1회 이상 받을 수 있는 비율을 86% 이상으로 한다.	86%	65.5%	68.8%	77.5%	87.1% (9.6%p▲)

주 1) 음영 표시는 미달성 항목임.

2) † 표시는 접근성 항목에서 전년보다 소요시간이 늘어난 경우, ▲ 표시는 일반 항목에서 전년보다 달성률이 향상된 경우, ▽ 표시는 전년보다 달성률이 하락한 경우임.



2.2. 농어촌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 개요

- 도시와 농어촌 지역 주민의 주관적 삶의 질 실태를 파악하여 삶의 질 향상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농어촌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를 수행하였다.
- 2023년도 정주 만족도 조사에서 수행된 주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도시·농어촌 주민의 전반적인 만족도 및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의 4대 전략별 (보건·복지, 교육·문화, 정주기반, 경제·일자리) 정주 여건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농어촌 주민 삶의 질 실태를 파악하였다.
 - 2023년 수행한 농어촌 영향평가 대상 정책 과제의 내용을 반영하여 도시 및 농어촌 지역의 난방 여건 실태를 파악하였다.

❖ 주요 추진 내용

□ 조사 개요

- 조사 대상 및 방법
 - 설문조사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와 방문 면접 조사를 함께 진행하였다.
 - 2023년 10월 18일부터 11월 16일까지 4주간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 동 지역을 도시로, 읍·면 지역을 농어촌으로 구분하여 지역별 할당 표본 추출 (Quota Sampling) 방법을 채택하였다. 최종적으로 집계된 표본 수는 4,100명이며, 그 중 도시(동부) 지역 주민 응답자는 1,597명, 농어촌(읍·면부) 지역 주민 응답자는 2,503명이다.

II. 2023년 주요 추진 업무

○ 조사 항목

- 만족도 관련 조사 항목은 조사의 일관성을 위해 주요 조사 항목을 유지하되, 질문의 명확성과 가독성을 고려하여 일부 문항을 수정하고,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과 이슈를 반영하여 신규 문항을 추가하였다.
 - * 신규 문항: (정주기반) 에너지 인프라, (경제·일자리) 지역내 물가, (이주의향) 이주하고자 하는 시기
- 2023년 농어촌 영향평가 주제인 ‘난방·에너지 비용 경감’과 관련하여 농어촌 지역의 난방 여건 실태를 추가로 조사하였다.
- 만족도를 묻는 각 항목은 11점 척도(0~10점)로 측정하였고, 일부 항목은 지난 조사 결과와 비교할 수 있도록 기존과 동일한 측정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2023년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조사 항목〉

부문	구분	세부 항목
만족도 조사 부분	전반적인 삶의 질 만족도	전반적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행복감 - 살고 있는 곳에서의 만족감 - 마을 발전 전망 - 시·군 발전 전망 - 주관적 건강 인식
		주관적 웰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즘 삶의 전반적 만족도 - 어제의 행복 정도 - 어제의 근심 및 걱정 정도 - 어제의 우울 정도 - 요즘 하는 일의 전반적 가치
		공동체 및 지역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소속감 - 이웃과의 관계 - 거주지역에 대한 정책 신뢰도 - 지역사회 활동 참여도 - 타 지역 주민에 대한 우호성 - 타 지역 주민과의 어울림(교류)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 4대 전략별 삶의 질 여건에 대한 만족도	- 4대 부문별 세부 여건에 대한 만족도 ※ 4대 부문: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 4개 추진 전략 (보건·복지, 교육·문화, 정주기반, 경제·일자리)
	4대 전략별 정책 중요도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4개 전략 부문 정책 중요도
	이주 의향	- 이주 의향 - 이주하고자 하는 지역 및 시기 - 이주하고자 하는 이유
농어촌 영향평가	난방 여건	- 주사용연료 및 겨울철 월평균 난방비 - 난방시설 노후화, 단열 부실, 연료비 부담 - 에너지 관련 정책 경험 여부 및 만족도 - 난방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



□ 전반적인 만족도 결과

- ‘현재 행복감’,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서의 만족감’, ‘주관적 건강 인식’은 농어촌 지역의 주민이 도시 지역 주민보다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이는 2020년 이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 도시 지역 대비 농어촌 지역의 점수가 높은 ‘현재 행복감’과 ‘주관적 건강 인식’은 도·농 간 격차가 계속 커지고 있으며,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서의 만족감’ 점수 격차는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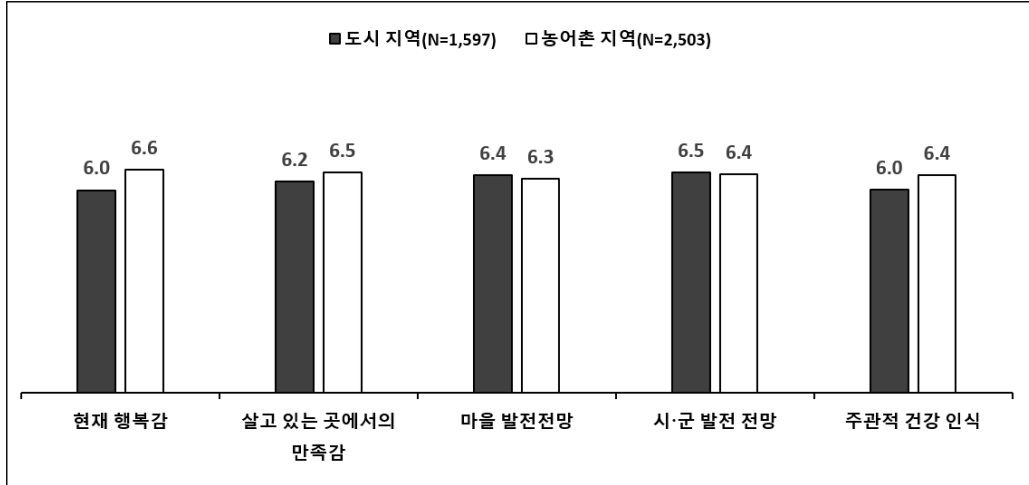
구분		도시 지역	농어촌 지역	도·농 간 차이
현재 행복감	2020	5.5	6.2	0.7
	2021	6.2	6.6	0.4
	2022	5.8	6.3	0.5
	2023	6.0	6.6	0.6
살고 있는 곳에서의 만족감	2020	5.8	6.3	0.5
	2021	6.4	6.7	0.3
	2022	6.0	6.3	0.3
	2023	6.2	6.5	0.3
마을 발전 전망	2020	6.2	5.7	-0.5
	2021	6.8	6.5	-0.3
	2022	6.3	6.1	-0.2
	2023	6.4	6.3	-0.1
시·군 발전 전망	2020	6.3	6.0	-0.3
	2021	6.9	6.6	-0.3
	2022	6.4	6.3	-0.1
	2023	6.5	6.4	-0.1
주관적 건강 인식	2020	-	-	-
	2021	6.3	6.5	0.2
	2022	5.9	6.3	0.4
	2023	6.0	6.4	0.4
전체 평균	2020	5.9	6.0	0.1
	2021	6.5	6.6	0.1
	2022	6.1	6.3	0.2
	2023	6.2	6.4	0.2

주: ‘주관적 건강 인식’ 문항은 2021년에 신규로 추가되어 2020년 평균 점수에 포함되지 않음.

II. 2023년 주요 추진 업무

〈전반적인 만족도 조사 결과〉

(단위: 점)



○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최근 삶에 대한 ‘주관적 웰빙 인식’ 조사 결과, 농어촌 지역 주민들이 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결과적으로 5개 문항을 포괄하는 평균 점수는 농어촌 지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농어촌 주민들이 도시 주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본인의 삶에 대해 만족도가 높고, 근심·걱정이나 우울감의 정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주관적 웰빙 인식 변화〉

(단위: 점)

구분	요즘 삶의 전반적 만족도			어제의 행복 정도			어제의 근심 및 걱정 정도			어제의 우울 정도			요즘 하는 일의 전반적 가치			전체 평균		
	'20	'22	'23	'20	'22	'23	'20	'22	'23	'20	'22	'23	'20	'22	'23	'20	'22	'23
도시	5.5	5.7	6.0	5.6	5.8	6.1	5.9	5.8	5.5	5.1	4.5	4.4	5.7	5.7	5.8	5.2	5.4	5.6
농어촌	6.1	6.2	6.6	6.1	6.3	6.6	4.9	4.9	5.1	4.3	3.9	4.0	5.9	6.1	6.3	5.8	6.0	6.0
도·농 차이	0.6	0.5	0.6	0.5	0.5	0.5	-1.0	-0.9	-0.4	-0.8	-0.6	-0.4	0.2	0.4	0.5	0.6	0.6	0.4

주 1) 주관적 웰빙 항목은 2021년 조사에서 제외되었음.

2) '어제의 근심 및 걱정 정도', '어제의 우울 정도' 문항은 값이 높을수록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함.

3) 전체 평균 산출 시 '어제의 근심 및 걱정 정도', '어제의 우울 정도' 문항은 역코딩 후 점수 산출에 적용함.



- ‘공동체 및 지역사회’ 점수는 모든 항목에서 농어촌 지역 주민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으며, ‘타 지역 주민과의 어울림’ 항목은 도시 지역 주민의 만족도와 동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지역 소속감’, ‘이웃과의 관계’, ‘지역사회 활동 참여도’ 문항에서 농어촌 지역 주민의 만족도가 각각 0.6점 높으며, ‘거주 지역에 대한 정부 정책 신뢰’, ‘타 지역 주민에 대한 우호성’ 문항은 각각 0.2점 높게 나타났다.

<공동체 및 지역사회 부문에 대한 인식>

(단위: 점)

구분	도시 지역	농어촌 지역	도·농 차이
지역 소속감	2020	5.2	0.7
	2021	5.7	0.4
	2022	5.4	0.5
	2023	5.5	0.6
이웃과의 관계	2020	5.4	0.8
	2021	5.8	0.6
	2022	5.7	0.6
	2023	5.8	0.6
거주지역에 대한 정책 신뢰도	2020	5.3	0.1
	2021	5.6	0.4
	2022	5.8	0.0
	2023	5.8	0.2
지역 사회활동 참여	2020	-	-
	2021	-	-
	2022	4.2	0.3
	2023	4.3	0.6
타 지역 주민에 대한 우호성	2020	-	-
	2021	-	-
	2022	6.1	0.2
	2023	6.1	0.2
타 지역 주민과의 어울림	2020	-	-
	2021	-	-
	2022	4.6	-0.3
	2023	4.6	0.0
전체 평균	2020	5.3	0.5
	2021	5.7	0.5
	2022	5.3	0.2
	2023	5.4	0.4

주: ‘지역 사회활동 참여’, ‘타 지역 주민에 대한 우호성’, ‘타 지역 주민과의 어울림’ 문항은 2022년에 신규로 추가되어 2020년, 2021년 평균 점수에 포함되지 않음.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 4대 전략별 만족도 결과

- 제4차 기본계획 4대 전략별 만족도 점수는 보건·복지, 교육·문화, 정주기반 부문에서 도시 지역 주민의 만족도가 농어촌 주민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도·농 간 만족도 평균 점수 분석 결과, 보건·복지 부문은 도시 지역 주민의 만족도 점수가 1.4점, 교육·문화 부문은 0.6점, 정주기반 부문은 0.9점 높게 나타났다으며, 경제·일자리 부문은 농어촌 지역 주민의 만족도 점수가 0.2점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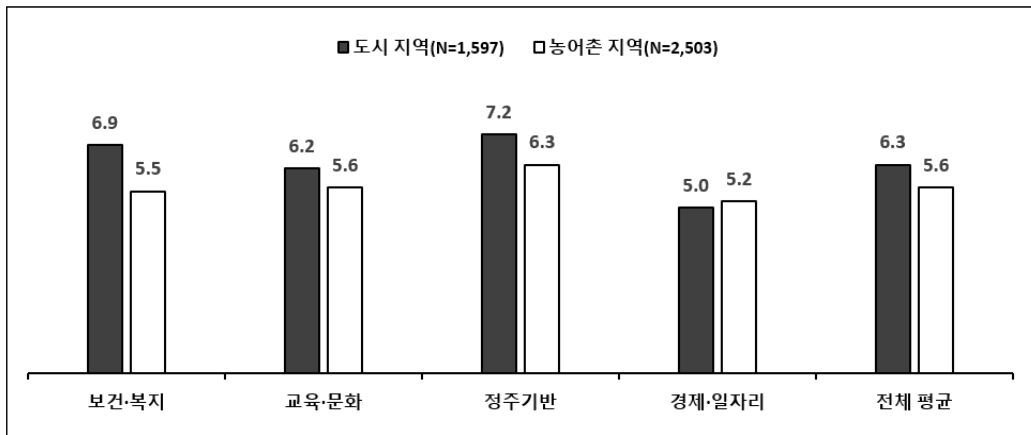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4대 전략별 만족도〉

(단위: 점)

전략	도시 지역		농어촌 지역		도·농 간 차이 (농어촌 지역-도시 지역)	
	'22	'23	'22	'23	'22	'23
보건·복지	6.8	6.9	5.1	5.5	-1.7	-1.4
교육·문화	6.3	6.2	5.2	5.6	-1.1	-0.6
정주기반	7.1	7.2	6.2	6.3	-0.9	-0.9
경제·일자리	5.2	5.0	4.7	5.2	-0.5	0.2
전체 평균	6.4	6.3	5.3	5.6	-1.1	-0.7

〈4대 전략별 만족도 평균 점수〉

(단위: 점)





-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보건·복지 부문(도시 6.9점, 농어촌 5.5점)의 도·농 간 만족도 점수 격차는 1.4점으로, 4대 부문 중 격차가 가장 큰 부문으로 나타났다.
 - 교육·문화 부문에서는 ‘방과후 교육 기회’, ‘문화·여가 시설’ 항목의 도·농 간 만족도 격차가 각각 0.9점, 0.7점으로 크게 나타났다.
 - 정주기반 부문에서는 신규 문항으로 추가된 ‘난방 인프라’ 항목의 도·농 간 만족도 격차가 1.8점으로 크게 나타났다.
 - 경제·일자리 부문에서는 도시 5.0점, 농촌 5.2점으로 2018~2022년 조사의 결과와 달리 전반적으로 농어촌 지역 주민들이 도시 지역 주민보다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 4대 전략 부문 중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문에 대한 의견에서 도시 및 농어촌 지역 모두 ‘필요 시 받을 수 있는 적절한 보건의료 및 복지 서비스 여건’과 ‘생활하기에 편리하고 안전한 정주기반 여건’을 꼽았다.
 - 4대 전략 부문별 중요도 점수는 농어촌 지역에 비해 도시 지역이 소폭 높았고, 도시 지역과 농어촌 지역 모두 보건·복지 및 정주기반, 교육·문화, 경제·일자리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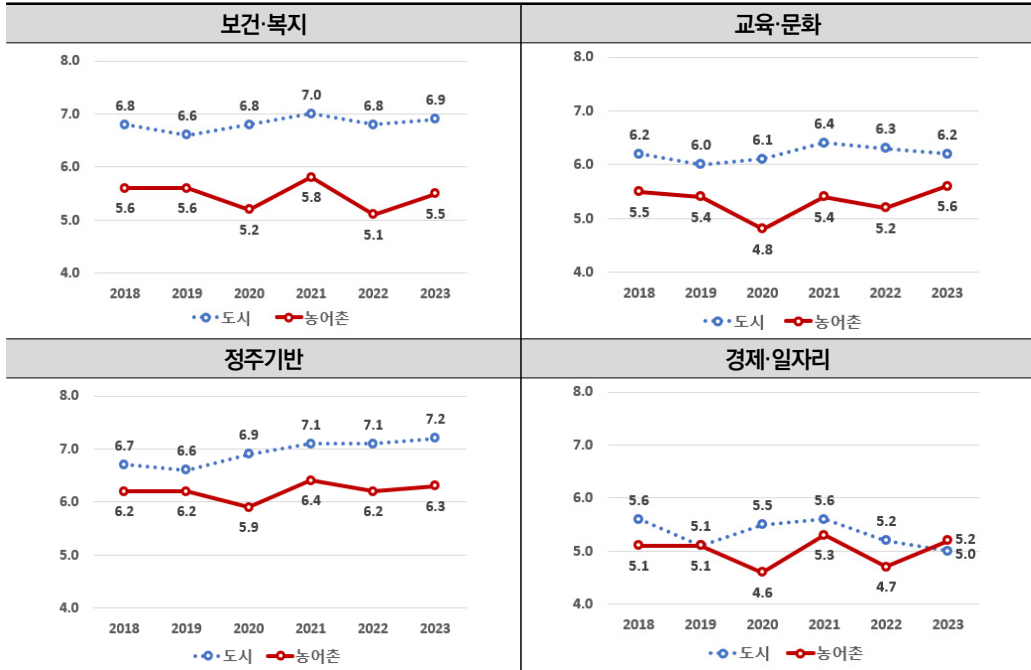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4대 전략별 중요도〉

(단위: 점)

전략	도시 지역	농어촌 지역
필요 시 받을 수 있는 적절한 보건의료 및 복지 서비스 여건	7.2	6.8
필요한 것을 배우거나 여가를 누릴 수 있는 교육 및 문화 여건	6.7	6.5
생활하기에 편리하고 안전한 정주기반 여건	7.2	6.8
적절한 소득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경제·일자리 여건	6.6	6.4

〈4대 전략별 도·농 만족도 추이〉

(단위: 점)



□ 농어촌 지역 주민의 난방 여건 관련 인식

○ 농어촌 지역의 난방 여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난방시설 노후화 정도’, ‘단열 부실 정도’, ‘난방연료의 가격 부담 정도’를 측정하였다. 세 가지 항목 모두 농어촌 지역 주민의 부정적 응답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도시 지역과 농어촌 지역의 ‘난방시설 노후화 정도’는 각각 4.8점, 5.0점으로 나타났으며, ‘단열 부실 정도’는 각각 5.1점, 5.3점으로 두 문항 모두 0.2점의 격차가 나타났다.
- ‘난방연료의 가격 부담 정도’는 도시 지역과 농어촌 지역 각각 5.0점, 5.7점으로 나타나 농어촌 지역 주민이 느끼는 난방비 부담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 및 농어촌 지역의 난방 여건에 대한 인식〉

(단위: 점)

구분	난방시설 노후화 정도	단열 부실 정도	난방연료의 가격 부담 정도
도시 지역	4.8	5.1	5.0
농어촌 지역	5.0	5.3	5.7
차이	0.2	0.2	0.7

○ 농어촌 지역을 읍 지역과 면 지역으로 구분하여 난방 여건을 분석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면 지역 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읍·면 간 격차는 도·농 간 격차보다 더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읍 지역과 면 지역의 ‘난방시설 노후화 정도’는 각각 4.6점, 5.4점으로 0.8점의 격차가 나타나 도·농 간 격차보다 크게 조사되었다. ‘단열 부실 정도’는 각각 5.1점, 5.5점으로 도·농 간 격차보다 큰 0.4점 차이가 나타났다.

〈읍 지역 및 면 지역의 난방 여건에 대한 인식〉

(단위: 점)

구분	난방시설 노후화 정도	단열 부실 정도	난방연료의 가격 부담 정도
읍 지역	4.6	5.1	5.1
면 지역	5.4	5.5	6.1
차이	0.8	0.4	1.0

○ 도시와 농어촌 지역 주민들이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가장 필요하게 생각하는 정책은 ‘에너지 공급 인프라 확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도시 지역 주민과 농어촌 지역 주민 모두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에너지 공급 인프라 확대’가 각각 31.6%, 29.0%(읍 지역 30.9%, 면지역 27.3%)로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난방 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정책 방향〉

(단위: %)

구분	에너지바우처 등 직접지원 확대	주택 개조 사업	에너지 공급 인프라 확대	주민공동 난방비 지원	난방 효율 지원 확대	기타
도시 지역	21.5	25.3	31.6	3.1	17.2	1.4
농어촌 지역	24.6	25.6	29.0	4.8	15.3	0.7
읍 지역	26.2	22.5	30.9	3.8	15.9	0.7
면 지역	23.1	28.6	27.3	5.7	14.8	0.6

□ 시사점

- 2023년 정주 만족도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전반적인 만족도에 있어서 농어촌 지역 주민의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으나,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의 4대 전략에 따른 여건의 평균 점수는 도시 지역 주민의 만족도가 농어촌 주민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 개인의 심리 상태를 대변하는 ‘주관적 웰빙 만족도’에서 도시 지역의 부정적 정서가 개선된 것과 달리 농어촌 지역 주민의 만족도는 전년도와 비슷하게 유지되었다.
 - 도시 지역의 부정적 정서가 농어촌 지역보다 뚜렷하게 나타났으나, 농어촌 지역 또한 부정적 정서가 악화되고 있어 이를 심도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 4대 전략 중 보건·복지 부문과 정주기반 부문의 도·농 간 격차가 크게 나타나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 정주 만족도 조사의 핵심 지표라 할 수 있는 4대 부문별 만족도에서 교육·문화 부문의 격차가 줄어들고, 경제·일자리 부문의 만족도 점수는 역전되는 성과가 나타났으나, 보건·복지 및 정주여건 부문에서는 도·농 간 격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못했다.
- 난방 여건에 대한 조사 결과, 농어촌 지역의 난방 여건 및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연료 공급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동시에 노후 시설 및 주택의 개선사업 등과 함께 추진하여 실질적인 난방 효율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정책적 연계가 필요하다.
 - 농어촌 지역의 낮은 인구밀도, 산간지대·해안가 등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농어촌 지역에 에너지원 공급 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를 대체하기 위해 농어촌 지역에 LPG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하는 등 에너지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되고 있지만, 주민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므로 더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2.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심층연구

❖ 개요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심층연구는 국책 연구원 및 시·도 연구원으로 구성된 삶의 질 향상 정책 지원 네트워크에 참여한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기관별 전문 분야에 대하여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검토하고 새로운 정책의 적용 방안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제4차 기본계획의 4대 전략에 대한 정부 부처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 주제를 선정하며, 전문지원기관이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하여 업무 수행 중 현황 파악 및 정책개선을 위해 심층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주제로 선정할 수 있다.
- 2023년 심층연구는 제4차 기본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와, 2022년 제정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정책 효과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 제4차 기본계획 종합평가는 전문지원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연구를 수행하였다.
 -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추진방안 연구는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가진 한신대학교 연구진이 수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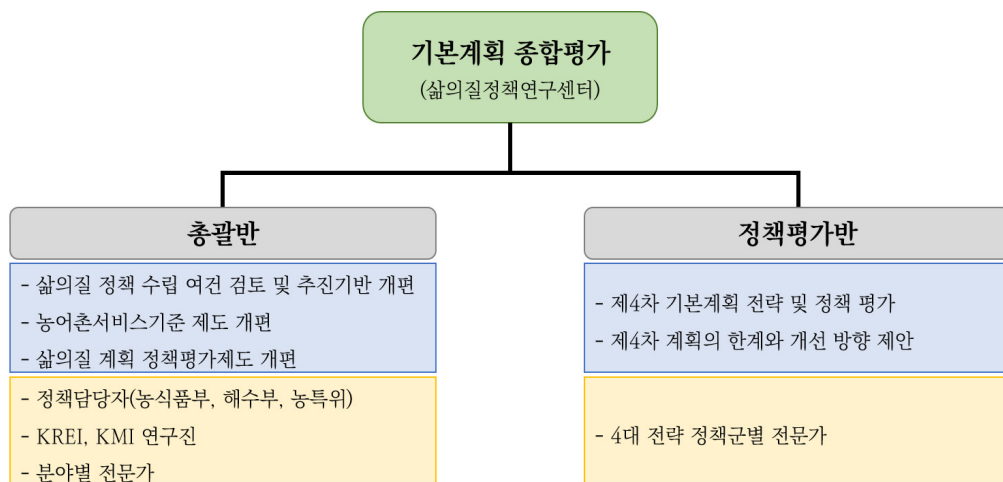
〈2023년 심층연구 추진내역〉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 제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이철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종합평가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	장종익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추진방안

2.3.1. 제4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종합평가

- **(배경)** 2024년에 수행할 제5차 기본계획 수립의 준비를 위해 제4차 기본계획의 정책 추진체계 및 평가·환류체계의 개선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향 설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제4차 기본계획 종합평가는 5개년 기본계획 4년 차에 실시하며, 그동안의 성과와 문제점, 개선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제5차 기본계획 수립시 반영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제4차 기본계획(2020~2024) 추진에 따른 삶의 질 개선 등의 성과를 정량적, 정성적 지표를 토대로 평가하고, 제5차 기본계획(2025~2029)의 정책 목표 및 정책 분야, 신규 과제 등을 도출한다.
 - 제4차 기본계획 종합평가는 농어업인 삶의 질 정책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총괄반과 정책평가반을 구성하여 이루어졌다.
 - 총괄반은 제4차 기본계획의 추진체계와 평가·환류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 역할을 한다. 정책평가반은 4대 전략 부문별 16개 정책 군에 대해 종합평가를 수행하고 제5차 기본계획의 신규 정책 분야 및 과제를 도출한다.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 종합평가 평가단 구성〉





□ 4대 전략별 평가 결과

- **(보건·복지 전략)** 본 전략은 농어촌의 고령화·과소화 심화에 대응하여 지역 맞춤형 돌봄 모델을 개발·확산하고 열악한 의료 여건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주요 성과로 의료 취약 지역 해소 및 예방적 의료 서비스를 제고하여 농어촌 지역 의료 여건을 개선하였다. 또한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보육·육아서비스 기반을 확충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고령·취약 농어업인의 소득 불안정 및 농어업 관련 위험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사회 안전망을 내실화하였다.
 - 다만 농어촌의 인구 감소·고령화에 따라 예상되는 전문인력 부족, 지역별 격차에 대한 대응 방안이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통합돌봄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부처간 협업을 통한 지자체, 민간기관 등의 지역 단위 통합 돌봄 거버넌스 구축은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낮은 농업인 연금 가입률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농어촌 사회안전망 구축은 미흡하다고 평가되었다.
 -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방문형 의료·간호 서비스 제공 사업을 확대하여야 하며, 관련 법률에 근거한 취약 노인 대상 예방적 돌봄 서비스 사업을 추가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농어촌 내 국공립 어린이집을 거점으로 시간제 보육 사업을 연계·운영하여 농어촌 내 가장 수요가 높은 긴급·일시 보육,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 **(교육·문화 전략)** 본 전략은 농어촌의 서비스 접근성을 보완하여 생애주기별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농어촌 주민의 문화·여가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주요 성과로 통학 여건을 개선하여 농어촌 학생의 교육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고, 농어촌 환경을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또한 성인 문해 교육으로 문해 노인들이 사회 활동에 참여하여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면서 수혜자들의 삶의 만족도 증가에 기여하였다. 농어촌 문화 공동체를 활성화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문화·여가 향유가 가능하도록 지원하였다.
 - 한계로는 통학버스 교통안전, 농어촌 통학로의 구조적인 문제가 위협 요인으로 지목되었다. 고령자 위주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세대와 생애주기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일부 사업의 성과 지표를 도시와 농어촌을 구분하여 사업의 효과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II. 2023년 주요 추진 업무

있었다.

- 제5차 기본계획에서는 지역교육협의체를 중심으로 통학 안전 관련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하며, 농어촌 문화 프로그램과 평생교육 사업 등을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 이양된 체육·문화·여가 사업에 대해 중앙정부 차원의 사업 관리체계, 전문인력 지원, 모니터링 등이 필요하다.
- **(정주생활기반 전략)** 해당 전략은 농어촌 정주 특성에 맞추어 생활서비스 공급망을 확충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주요 성과로 농어촌 지역 교통여건을 개선하여 각종 사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였고, 농어촌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 체감형 기초생활 인프라를 확충하였다.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을 제공하여 농어촌 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였으며, 휴식·여가 공간으로서 농어촌 공간의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 농촌공간계획 제도화 등의 정책을 추진하였다.
 - 교통여건 개선과 관련해서 주민의 만족도와 서비스 수준의 향상 정도가 미흡한 문제가 제기되었고, 농어촌 인구 감소·고령화 등 장기적인 농어촌 변화를 고려하여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사업 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쾌적한 주거환경, 농어촌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민참여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 지리정보시스템(GIS)에 기반한 교통여건 사업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교통 관련 사업을 통합관리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재해 안전 관련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마을 인프라 확충 등의 농촌 지역개발 사업은 농어촌 인구감소, 지방분권 확대, 농어촌 공동체 축소 등에 대응하여 사업 추진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정책 제언이 있었다.
- **(경제·일자리 전략)** 해당 전략은 융복합산업 고도화·로컬푸드 확산·농어촌 관광 활성화 등을 추진하여 지역 내 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농어촌 주민들의 소득원을 다각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제4차 기본계획 기간 농촌융복합사업 관련 맞춤형 종합지원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 일자리와 연계된 인력유입 등 농어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농어촌 관광 홍보 강화와 수요 증대 등으로 관광 경영체가 늘어나고 매출이 증가하였다. 또한 청년, 귀농어·귀촌인의 창업 촉진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다문화가정을 포함한 여성의 취업 지원을 강화하였다.



- 다만 일부 사업의 성과 목표가 사업의 실효성을 평가하기에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장기거주 다문화 여성의 증가를 고려하여 다문화 여성 역량강화 사업의 정착 단계별 지표 설정 및 사후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 정책 개선 방향으로 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농촌 내 다양한 민간 활동 주체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 내용 보완이 필요하다. 취·창업 촉진과 관련해서 정책 취지에 맞는 사업 시행을 평가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제5차 기본계획 기본 방향

- 제5차 기본계획에서는 농어촌 삶의 질 관련 고유 어젠다(agenda)를 발굴하고, 관계 부처에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고유한 비전과 어젠다를 제시하고, 어젠다에 부합하는 독자적인 사업을 발굴하여 부처에 제안하도록 삶의 질 정책 영역의 확장을 고려해야 한다. 이때 농어촌다움, 공동체 활동, 지역사회 활동 등 농어촌의 강점을 중심으로 한 정책·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 새로운 법·제도 도입에 따른 변화를 고려한 삶의 질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 앞으로 새롭게 도입·변화하는 법·제도와 이를 바탕으로 일어날 변화를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여러 제도적 변화에 따라서 기존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중간지원조직이나 민간 주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는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 부족한 인적 자원과 서비스 공급 역량에 대응하여 ICT·스마트기술을 활용하여 주거환경과 생활서비스 전달체계의 혁신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 삶의 질 향상 정책·사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정책시행 협력체계를 구축·강화할 필요가 있다.
 - 여러 부처에서 시행되는 사업의 연계를 통해 협력적·통합적인 추진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 부처 간 소통·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다양한 지역 활동 조직·단체가 연계·협력하여 여러 부처의 사업을 함께 추진하면서 실질적으로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역 조직·단체를 육

II. 2023년 주요 추진 업무

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 내 인력·자원·기술을 활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발전의 성과가 지역 내에서 순환하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정책·사업을 발굴하도록 한다.

- 정책 사업의 성과가 농어촌 주민에게 어떻게 전달되고 이용되는지 점검·평가할 필요가 있다.
 - 일부 시행계획의 경우 도시와 농어촌의 성과지표가 동일함에 따라, 농어촌에서의 사업성과가 적절하게 평가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제5차 기본계획에서는 시설·서비스의 공급 위주의 평가에서 농어촌 주민이 서비스를 적절하게 이용하는지를 중심으로 점검·평가체계의 변경을 고려해야 한다.
- 인구 감소·주민 구성 다변화, 고령화에 따라 다변화된 농어촌 구성원의 지역 사회 활동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주체를 육성해야 한다.
 -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주체들이 각자 활동을 전문화·고도화하고 지역 내 네트워크 공유 시스템을 바탕으로 파트너십을 형성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지역 문제를 공론화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주민들을 조직화하여 지역사회 활동 주체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2.3.2. 지역농림업 발전사업 추진방안 연구

- **(배경)** 국회는 정부 주도의 획일적 농어촌 발전정책을 탈피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성과 민간의 창의성을 발휘하여 농산어촌 지역의 새로운 성장모델이 등장할 수 있는 민·관협력 사업을 발굴·지원하여 소멸위험에 처한 농어촌 지역의 활력과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 이 법률은 민·관협력을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이 추진되도록 ‘지역농림어업 발전 성과보상 사업’의 추진을 담고 있어 해당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내용 마련이 요구되었다.
 - 지역농림어업 발전을 위한 성과보상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계획 마련, 사업운영기관 확보, 민·관의 실시협약 체결, 평가기관의 성과평가 측정·평가, 성과보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의 세부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목적)** 이 연구는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정책추진 방안을 마련하여 법률 목적 달성과 정책실행 효과 제고 방안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주요 내용)** 사회성과보상(SIB) 사업과 사업결과보상(PbR) 사업의 비교 분석 및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특징을 파악하고,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해 추진체계 설계의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또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체계 및 제안을 제시하고 법률 보완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과 사회성과보상 사업에 관한 법률 발의안과의 비교·분석을 통한 특징과 위상을 규명하였다.
 - 사회성과보상 사업과 사업결과보상 보조금 사업의 개념, 국내외 사례, 성과와 한계, 성공요인 등에 대해 조사·분석하였다.
 - 사업결과보상 보조금 사업의 성공을 위한 조건과 정책 매뉴얼을 작성하고,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안의 법제 심사 등에 필요한 대응자료 마련을 위한 유사입법 사례를 검토하였다.
 - 사회성과연계채권(SIB) 사업 관련 전문가 초청 포럼을 개최하고, 법률전문가 및 농촌 정책사업 전문가와 기초자치단체 관련 공무원의 자문을 구했다.
- **(정책 제안)**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체계 및 제안을 제시하고 법률 보완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SIB 방식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운영기관의 몫을 추진기관인 지방자치단체와 평가기관이 분담해서 사업 수행기관의 성과를 높이도록 할 필요가 있다.
 - 사업의 성공을 위한 주체별 역할 및 책임과 관련해서는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성공이 추진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전문성에 크게 좌우된다는 점에 주목하며 총괄부서와 사업부서 사이의 역할 분담 및 협력이 필요하다.
 - 사업의 추진단계별 위험 요인 관리방안과 관련해서는 ① 지역의 사회문제 해결 사업이 소홀히 취급될 위험, ② 대상 사업이 가시적 성과 위주로 선정될 위험, ③ 운영기관의 왜곡된 인센티브가 발생할 위험, ④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니고 있더라도 사업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발전사업에 응모하기 어렵게 될 위험을 확인하고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II. 2023년 주요 추진 업무

- 사업 성공을 위한 생태계 조성방안으로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활용을 통한 사회적 가치 증진 활동 확산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발전사업 생태계 환경 조성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역할, 양질의 데이터 확보와 강력한 성과정보 시스템 구축, 결과보상사업 지원센터 설립 등을 제시했다.
- “민간운영기관”의 명칭을 “민간사업수행기관”으로 변경하여 사회성과보상 사업의 용어와의 혼동을 방지하고 그 역할을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법인”을 말한다고 개정할 필요가 있다.
-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범위를 경제사업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 분야로 확대해야 한다. 또한, 민간사업수행기관이 활용 가능한 자금의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소멸위기에 처해있는 농산어촌 지역에서 민간기관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역량을 동원할 수 있는 성과보상 기반의 새로운 정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2.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 우수사례집 발간

❖ 개요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 우수사례집은 범부처 차원의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지역사회에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확인하고,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동기 확산을 유도하고자 2015년부터 발간하고 있다.
- 보건·복지, 교육·문화, 정주기반, 경제·일자리 등의 분야에서 농어업인 등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는 15개 현장 사례를 선정하여 수록하였다.
 - 2023년 ‘농촌에서 만나는 행복한 삶의 이야기’ 우수사례집에는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자체 및 마을 공동체의 다양한 노력을 발굴·조사한 한편, 과거 사례집에 수록하였던 우수사례 중 현재까지 활동 또는 프로그램이 유지되고 있는 일부 사례를 선정하여 추적 조사하였다.



❖ 주요 내용

□ 함께 만들어가는 농촌

- ‘이음’으로 키워가는 공동체의 작은 변화들 ‘**사회적협동조합 지리산이음**’
 - (소재지) 전라북도 남원시 산내면
 - (키워드) 공동체 활동 지원, 작은변화 지원, 이음/연결, 커뮤니티 공간 기반
 - (주요내용) 사회적협동조합 지리산이음은 남원시 산내 지역을 중심으로 지리산 권역에서 일어나는 지역 이슈에 다양한 방식으로 관여하며 공동체 활동을 키워 나가고 있다. 특히 다양한 시각에서 우리 사회의 변화를 고민하고자 ‘지리산포럼’을 구상하여 10년 가까이 운영해오고 있다. 2021년에는 지리산이음이 펼치는 일의 확장과 커뮤니티 활동 공간에 대한 고민으로 농협 창고를 리모델링한 ‘작은변화베이스캠프 들썩’이 조성되었고, 지리산이음과 작은변화지원센터의 사무실 공간 및 컨퍼런스홀, 공유오피스 등 다양한 거점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 따뜻한 마음을 엮어가는 지역 서비스공동체, ‘**거창사회적농업지역네트워크협동조합**’
 - (소재지)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 (키워드) 사회적 농업, 지역 서비스공동체
 - (주요 내용)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거창군 내 발달장애 청소년과 저소득층 아동, 어르신들에게 통합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서비스 공동체 연결을 통해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있다. 마을회관에 직접 찾아가 어르신들에게 건강한 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농촌의 낡은 주거환경에서 거주하여 삶의 질과 생활 여건이 열악한 가정을 발굴하여 지역 업체와 연계한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사회적 농장에서 어르신과 장애인 청년에 일자리 제공 및 농업 활동을 통한 삶의 활력과 정서적 치유를 제공한다. 향후 더욱 전문적이며 다양한 영역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확대하기 위해 협업 단체를 계속해서 발굴해 나가고 있다.
- 문화를 매개로 주민 소통의 창을 마련하는 ‘**지역문화활력소 고래실**’
 - (소재지)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 (키워드) 지역문화창작공간, 농촌잡지, 지역문화콘텐츠, 문화재생



- **(주요내용)** 지역문화활력소 고래실은 옥천의 풍부한 문화를 매개로 지역민이 소통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지역 중심의 농촌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지역문화창작공간인 뚝방에서 고래실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과 카페, 전시와 공연, 모임과 행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농촌 월간지인 '월간 옥이네' 발행을 통해 옥천의 역사·문화, 공간, 사람의 이야기를 발굴하고 기록하여 지역사회에 작지만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이 밖에도 지역 마을여행 프로그램, 지역 출판 사업 등 옥천이 지닌 가치와 사회·문화적 자원들을 활용하여 다양한 문화재생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불편할수록 아름다운 섬, 도시 청년들의 울릉도 정착기, **'노마도르'**
 - **(소재지)** 경상북도 울릉군 북면
 - **(키워드)** 지역관광, 문화·예술, 로컬 크리에이터, 청년창업
 - **(주요 내용)** 도시의 청년들과 울릉도의 청년들이 모인 노마도르는 울릉도를 콘텐츠로 한 문화·예술 활동을 펼치며 지역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있다. 이들은 울릉도뿐만 아니라 강릉, 서울, 경주 등 전국구 지역 청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데, 특히 강릉과 울릉에서 지역 예술가, 로컬 창작자, 지역주민이 일주일 동안 함께 참여하는 문화예술축제인 '릉릉워크'를 진행하여 로컬콘텐츠 산업을 확산하고 있다. 또한 울릉도의 부족한 문화예술 인프라를 파악하여 채워주는 활동의 일환으로, 2019년부터 매년 '우리나라 가장 동쪽 영화제'를 개최하고 있다.

〈노마도르 - 릉릉워크와 우리나라 가장 동쪽 영화제〉



□ 꿈과 희망이 자라나는 농촌

○ 아이들과 농촌의 동반성장을 꿈꾸는, '늘푸른자연학교'

- (소재지) 경기도 여주시 점동면
- (키워드) 농촌유학, 가치교육, 마을교육공동체, 귀농귀촌, 지역활성화
- (주요내용) 농촌 지역의 교육 활성화를 위해 당현분교를 리모델링하여 농촌유학형 학교인 늘푸른자연학교를 설립하였고 밀머리농촌유학센터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늘푸른자연학교는 다중지능이론을 교육철학으로 국영수 이외에 다양한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밀머리농촌유학센터에서 교우간 공동체 생활을 배우고 지역민과 소통한다. 늘푸른자연학교는 학생, 학부모, 지역민, 마을활동가 등 온마을을 위한 지역축제도 매년 개최하고 있어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 사람과 책이 모이는 문화사랑방, '당오름작은도서관'

-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 (키워드) 작은도서관, 문화공간, 문화예술프로그램
- (주요내용) 당오름도서관은 송당리의 주민들과 아이들의 문화생활을 지원하는 문화사랑방으로 주민수요로 가득 채운 도서들과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주말과 방학기간에 토론, 놀이체육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는 서예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어르신들의 작품으로 전시회를 열어 소중한 경험을 제공하였다. 주민들은 도서관을 모임 공간으로 활용하면서 관계를 쌓아가는 공간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당오름도서관 - 삼춘서예 활동과 작품 전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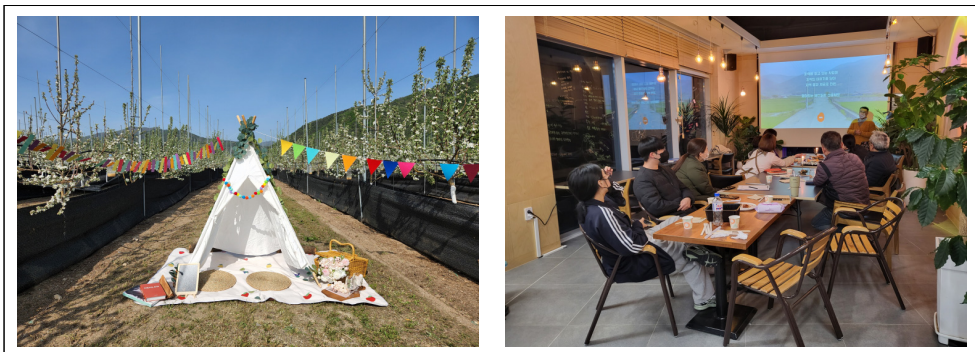




□ 활기를 찾아가는 농촌

- 농촌을 체험하는 새로운 형태, 팜크닉 농장으로의 여행, **‘프루떼(Fruitte)’**
 - (소재지) 서울시 동대문구
 - (키워드) 팜크닉, 팜큐레이터, 농장 체험, 6차산업
 - (주요내용) 프루떼는 전국 중소농가와 팜큐레이터가 함께 만든 프라이빗한 팜크닉 프로그램을 도시민들에게 제공하는 팜크닉 플랫폼이다. 가족단위 농촌체험 방문객들은 프라이빗한 피크닉 공간에서 농장의 자연물을 이용한 소소한 체험활동을 하고 직접 준비해온 음식을 먹을 수 있다. 프루떼는 농가가 시간이나 경제적으로 최대의 부담이 가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농장주에게 서비스 교육과 팜크닉 공간 조성, 농산물 판매 등을 지원한다.
- 장수군의 길을 만들고 길을 밝히는 청년들의 이야기, **‘장수청년산사공’**
 - (소재지) 전북 장수군 장수읍
 - (키워드) 청년공동체, 영한상점, 아이온놀이배움터
 - (주요내용) 장수청년산사공은 청년들이 장수에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제공하고 있다. 영한상점은 장수 청년들을 위한 거점공간으로 청년들은 이곳에서 창업을 준비할 수 있고 장수군 청년정책을 개선 및 발굴하는 공간으로도 활용된다. 산사공은 로컬사업도 추진하여 지역과 청년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영유아 돌봄시설인 아이온놀이배움터를 설립하여 농촌 아이들의 돌봄 교육 사각지대와 30~40대 학부모들의 보육 여건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포천 팜크닉 농장과 장수 영한상점에서 진행한 창업세미나〉



II. 2023년 주요 추진 업무

- 지속가능한 농업을 꿈꾸는 청년들, 발명으로 모이다, **‘발명’**
 - (소재지) 강원 영월군 상동읍
 - (키워드) 퍼머컬처(Permaculture), 청년농업인, 청년마을, 지역 공동체
 - (주요내용) 발명은 지속가능한 농업인 퍼머컬처를 기반으로 자급자족 라이프스타일을 시도하는 청년 농업인 단체이다. 이들은 ‘발명프렌즈’라는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퍼머컬처에 관심있는 청년들에게 지역살이 노하우와 퍼머컬처 농법 교육, 마케팅 경험들을 전수하여 지역에 도움이 되는 인재로 양성하고 있다. 올해부터 시작된 퍼머컬처 디자이너 코스(PDC)를 개설하여 청년 대상 교육을 활발히 하고 있는데, 참가자들은 각자의 삶터에서 퍼머컬처를 실현하거나 이를 활용한 비즈니스를 운영한다. 최근에는 ‘잘먹고 잘살기 위한 자급자족라이프실험소’를 운영하여 청년들이 농업과 친해지고 자연농법을 기반으로 한 선순환 체계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발명프렌즈 및 퍼머컬처 교육〉



□ 지속가능한 농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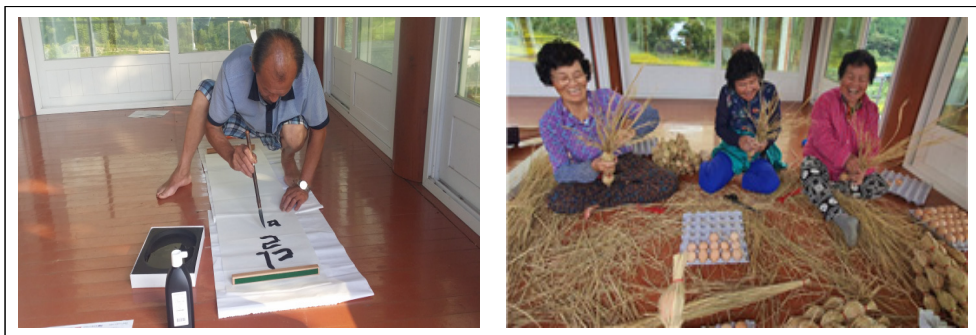
○ 채움과 나눔의 서로 돌봄 마을, '문성마을'

- (소재지) 전남 순천시 주암면
- (키워드) 마을공동체, 마을발전계획, 소득사업, 주민복지, 사회적경제
- (주요내용) 문성마을은 주민주도의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마을공동체를 회복하였다. 1차 사업에서 콩을 활용한 소득 창출과 마을 경관과 환경을 정비하였고, 2차 사업에서는 마을 인프라를 조성하였다. 현재 진행 중인 3차 사업에서는 정부 사업을 통해 농경 체험장, 귀농인의 집, 귀농 창업카페를 조성하고자 한다. 특히 3차 사업의 주안점은 주민복지로,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에 마을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다 함께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마을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고 있다.

○ 척박한 돌밭에서 '문화×농업'의 새 길을 만들어가는, '제주 보롬왓'

- (소재지)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 (키워드) 문화를 통한 농업의 부가가치 제고, 공유 시스템, 분업화 전문화
- (주요내용) 제주한울영농조합법인 보롬왓은 1차 농업 생산물인 메밀 등에 문화를 접목하고 2차, 3차산업으로 확장하여 6차산업으로 고부가가치화하고 있다. 제주 산 메밀을 경작해 다양한 가공식품과 생활용품으로 개발하여 온·오프라인에 판매한다. 보롬왓 카페에서는 직접 생산한 메밀로 만든 음료와 디저트, 다양한 농산물을 활용한 제품을 전시·판매한다. 보롬왓은 '같이의 가치' 농업을 추구하며, 개별 소유가 아닌 '공유'에 기반한 6차산업화 시스템을 지향한다. 최근에는 농업학교 교육과정을 준비하여 농업을 통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그리고 있다.

〈문성마을 연금수혜자의 나눔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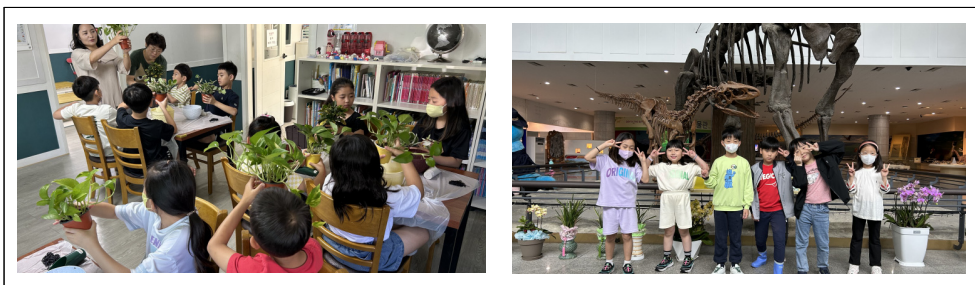


□ 2022년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우수사례

- 농업인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고 영농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농번기 아이돌봄방.
‘계룡시다함께돌봄센터’, ‘함안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
 - (소재지) 충남 계룡시 엄사면, 경남 함안군 군북면
 - (키워드) 아동돌봄, 농업인
 - (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보육 여건 개선을 위해 농번기 아이돌봄방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계룡시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농번기 아이돌봄방 사업을 통해 주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의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아이들에게 다양한 문화 경험을 제공하고 차별성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다. 함안군 여성농업인종합센터는 어린이집을 함께 운영하며 농번기 아이돌봄방 사업까지 시작하였다. 주말돌봄방은 통합반으로 운영되며 날마다 아이들이 희망하는 활동으로 채워진다.

- 가파도의 문화를 기록하고 주민공동체를 그려가는, **‘제주 위대한백수’**
 - (소재지)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 (키워드) 주민공동체, 생활문화공동체
 -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을 접하기 어려운 농어촌 주민에 생활문화 활동 참여 및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제주 가파도에 모인 청년공동체 위대한백수는 가파도의 정착하며 마을 어르신들과 건강하게 교류하기 위해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지원하였다. 이 사업으로 가파리 마을 지도 만들기, 가파리 마을 탐방 안내 영상을 제작하였고, 기획 과정에서 주민들과 깊이 교류하면서 주민들의 마음과 이야기를 담아내었다.

〈계룡시다함께돌봄센터 농번기 아이돌봄방 활동〉





- 실패해도 괜찮아! 귀농·귀촌을 꿈꾸는 이들의 자아실현을 돕는 ‘농촌에서 살아보기’, ‘제천 덕산누리마을’
 - (소재지) 충북 제천시 덕산면
 - (키워드) 귀농·귀촌, 청년, 창업
 - (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부는 귀농·귀촌 희망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덕산누리마을은 지속가능한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청년이 지역으로 유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다.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으로 ‘농촌 문화기획자 되어보기’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참가자 청년들이 5개월간 농촌살이를 경험하며 지역축제를 기획·개최하였다. 그리고 지역 내 유희시설을 마을 목공방으로 운영해 지역사회에 필요한 목공품을 제작·납품하여 정착을 위한 기술과 삶의 방식을 찾기도 하였다. 살아보기와 같은 단기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2년 안팎의 시간 동안 추가적인 생활 기반을 제공해주고 다양한 지역사회 네트워크와 청년들을 연결해주며 청년 정착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덕산누리마을 ‘농촌에서 살아보기’ 활동〉





3.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지원

3.1. 정책지원 네트워크 구성·운영

3.2.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운영 지원

3.3.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카드뉴스 및 인포그래픽 제작·홍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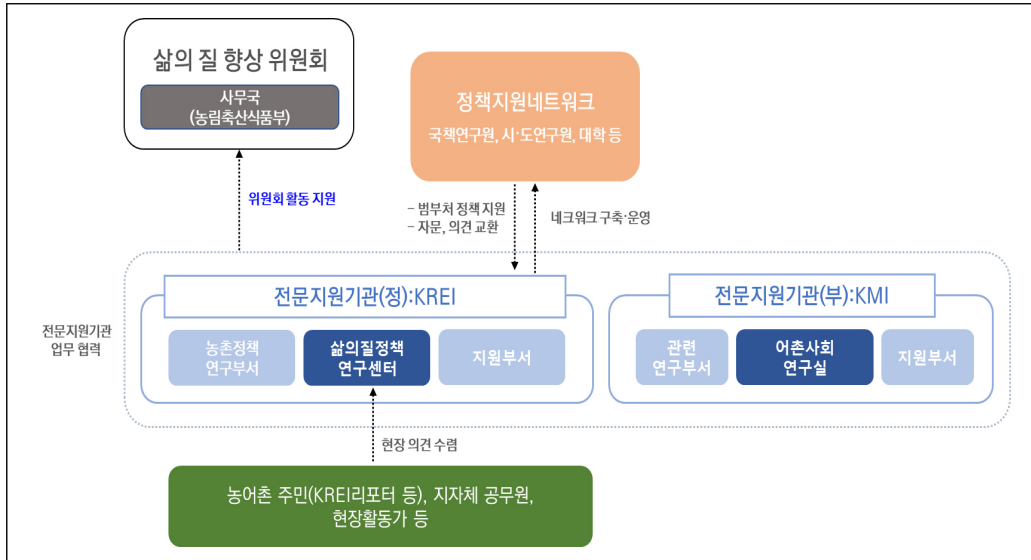
3.1. 정책지원 네트워크 구성·운영

❖ 개요

- 분야별 서비스 전달체계의 전문 활동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자 2015년도에 협약을 맺고 정책지원 네트워크를 구성하였다.
 - 분야별 서비스 전달자와 지역 활동가, 지자체 공무원과 지속적으로 교류하여 농촌 현장의 여론, 정책 수요, 연구 수요 등을 파악한다.
- 정책지원 네트워크는 크게 전문가,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농어촌 주민으로 구성되어 있다. 네트워크의 구성원들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필요시 협업하면서 농어촌의 삶의 질 관련 이슈를 발굴한다. 또한 네트워크는 농어촌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정책 및 연구 성과를 홍보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 7개의 국책 연구원, 9개의 시·도 연구원, KREI리포터로 이루어진 현장자문단 등이 활동하고 있다.
- 정책지원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과 관련한 정책 포럼을 운영하고 있다.
 - 2022년까지 농어촌지역정책포럼을 정기적으로 운영하였으며, 2023년에는 제4차 기본계획 종합평가를 위한 포럼을 3회차에 걸쳐 추진하였다.
- 한 해 동안의 농어촌 주민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살펴보고, 당해 주제와 관련된 현장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토론하는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 컨퍼런스’를 매년 운영하고 있다.
 - 2023년 컨퍼런스는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농어촌’을 주제로 제4차 기본계획의 성과를 점검하고 제5차 기본계획의 수립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하였다.



<정책지원 네트워크 체계>



❖ 주요 추진 결과

▣ 제4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종합평가 1차 포럼

○ 개요

- 일시: 2023년 10월 27일 (금) 14:00~16:00
- 장소: 오송&세종컨퍼런스 R1 회의실
- 주최 및 주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주제: 농어촌 삶의 질 여건 검토 및 추진 기반 개편

〈주요 내용〉

- 1차 포럼은 삶의 질 정책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자리로 삶의 질 정책 관련 여건 변화 검토 및 추진기반 개편 관련 발표와 종합토론이 진행되었다.
- 첫 번째로 한이철 삶의질정책연구센터 센터장이 농어촌 삶의 질 정책 여건에 대해 발제하였다. 농어촌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개요, 농어촌 삶의 질 관련 여건 변화, 삶의 질 관련 계획 및 정책 동향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농어촌 삶의 질 관련 예상되는 문제와 논의 사항을 제기하였다.
- 임정우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사무관은 농어촌 삶의 질 정책 추진체계 개편 방안에 대해 발제하였다. 삶의질위원회와 농특위의 통합을 위한 추진체계 개편 배경과 추진방안에 대해 설명하였고, 향후 논의 과제로 법률 정비(안)을 제안하였다.

〈주요 토론 내용〉

-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주재로 종합토론을 진행하였다.
- 박진희 농림축산식품부 사무관은 20년간 삶의 질 정책의 성과 분석을 바탕으로 제5차 기본계획에서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지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현재 농촌의 중요한 사항인 인구감소와 고령화, 소멸 문제에 대응하여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 김동진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의사 인력 확대 이슈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의료 인력을 늘려 지역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계획의 성과 달성 여부와 정책 성과는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고, 삶의 질 정책 20년간 미흡했던 정책 조정 기능을 제5차 기본계획에서는 가능하도록 노력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 홍길수 해양수산부 사무관은 해수부 사업의 정책 방향은 어촌 연안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삶의 질 측면에서 도서 지역이 더 취약성을 띠고 있으며 도서지역은 모든 측면에서 농촌지역보다 열악함을 강조하였다. 어촌 분야의 정책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1차 사업이 기초적인 인프라 개선이었다면 2차로 주거 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그 외 친환경 사업에 대한 논의도 확대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 성주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책 여건을 검토하는데 있어서 새로운 제도적 변화와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주체들의 활동 기반 조성되고 있는 변화를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에 새로이 도입한 제도들의 한계를 고려하여 핵심적인 것 위주로 정책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 박세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농어촌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고 서비스 확충을 위해 중앙, 지방정부의 소통·협력 체계가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특히 농촌 다문화 주민의 이슈가 중요하게 떠오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공공부문의 사회복지사의 경우에도 농어촌 지역, 특히 도서지역에 대한 기피가 나타나므로 현실적인 사후 설계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 이영성 서울대학교 교수는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제조업 종사자 수 중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금속 가공 등의 비중이 높고 도시를 제외한 도 지역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과 IT 전자부품 관련 연계 산업을 농어촌 지역에서 일자리 활성화로 연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재생에너지나 스마트팜, 미래식량과 관련된 바이오산업 등 농어촌 지역 관련 먹거리산업 가능성이 높으며 큰 산업을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II. 2023년 주요 추진 업무

- 이명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청년, 정책인구(관계인구, 생활인구 등)를 육성해서 농어촌 지역에서 역할 할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도시가 가질 수 없는 농촌다움, 농촌성을 부각하는 정주 여건과 이를 만들어가기 위한 정책목표를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며, 단편적으로는 농촌의 강점을 드러내는 정주만족도 조사 문항을 발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농어업인에 대한 복지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향후 5년, 20년 앞의 미래를 담은 키워드를 발굴하기를 제안하였다.
-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삶의 질 특별법이 제정될 초창기에 ‘농어업인 등’이라고 표현되었으나 결국 국민 전체의 복지 증진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관련 정책들을 담다 보니 현재 시점에서 한계가 나타날 수밖에 없으며, 농식품부에서는 국민 전체의 보편적인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이 불충분하니 타부처와의 협력이 불가피하고, 사무국 입장에서도 어려움을 많음을 설명하였다. 사무국이 농식품부에서 농특위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부처 간 협업과 연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잘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 장세길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이양되고 있는 다수의 문화 관련 사업들을 기본계획에 담을 필요성이 있으며 이에 따른 관리의 방안도 고민해야 함을 언급하였다.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비전에 부합하는 독자적인 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으며 농촌과 도시 지역을 포괄하는 사업의 경우 선정 기준이나 성과지표를 구분하여 측정할 필요도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민사회’로의 변화에 따라 기존의 다문화가족 정책과 다른 방식의 사업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점, 두 번째는 ‘근로시간이 단축’되며 여가시간을 보낼 공간으로서 농어촌으로서의 가능성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제안하였다.
- 이상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문연구원은 현재까지 삶의 질 기본계획은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유관 사업을 취합해서 평가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는 점이 한계라고 생각하며 위원회가 이관되고 향후 삶의 질 위원회만의 고유한 어젠다를 발굴해서 각 부처에 방향성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하였다. 향후 삶의 질 추진체계에서는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규제를 조절하고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지자체까지 정책 전달력이 강화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전체적인 정책 방향성은 통일하되 농촌과 어촌 각 지역의 세부 특성을 반영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 김상범 농촌진흥청 연구관은 농민들이 생각하는 삶의 질과 부처에서 생각하는 삶의 질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이유가 삶의 질 정책이 수립·전달되는 과정에서의 미흡함인 것으로 언급하였다. 제5차 기본계획을 수립 시 각 사업에서 5년 뒤, 또는 사업의 말미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구체화하고, 그와 관련된 사업이나 계획을 상세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부처에 요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을 제언하였다.

▣ 제4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종합평가 2차 포럼

○ 개요

- 일시: 2023년 11월 17일 (금) 14:00~16:00
- 장소: 서울 HJ비즈니스센터 세미나룸B
- 주최 및 주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주제: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개편

〈주요 내용〉

- 2차 포럼은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1건의 발표와 종합토론이 진행되었다.
- 권인혜 삶의질정책연구센터 조사연구팀장이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와 도입 배경, 연혁 등에 대해 소개하고 제도 개편을 위한 논의 사항을 발표하였다. 개편을 위한 주요 논의 사항으로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의 실효성 제고, 농어촌서비스기준 점검 및 결과 제시 방식 개선, 항목·목표치·설정방식 등 서비스기준 세부 내용 개편에 대해 제시하였다.

〈주요 토론 내용〉

-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주재로 종합토론이 진행되었다.
- 김용욱 전남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촌공간계획과 농촌협약과 연계할 필요가 있음을 말하며, 농어촌서비스기준에 민간서비스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또한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지표 달성도와 삶의 질 정책 평가의 각종 수치와의 괴리가 있음을 감안하여 개편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으며, 추후 새로운 지표로서 주거 공급 역량 등 주택 관련 지표를 고려해볼 것을 제안하였다.
- 심재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022년 삶의질정책연구센터에서 만든 거리 조락 함수를 이용하여 서비스 도달 시간을 측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공간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여 각 지역의 서비스 현황을 지도상에서 파악하여 공간계획 등 정책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 권순형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교육 분야 농어촌서비스기준과 관련해서는 시·도 교육청 역할이 더 강하고 교육부는 큰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 상황임을 언급하며, 교육 부문의 거버넌스 주체를 현장 실행력을 갖춘 17개 시·도교육감 협의체로 둘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농어촌 통학 문제와 관련하여 통학버스 운영의 효율화와 안전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 홍길수 해양수산부 사무관은 도시에서 농어촌으로 향하는 지표가 필요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미래지향적 지표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원주민과 외국인이 함께 살아 갈아가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여 향후 농어촌서비스기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주시기를 당부하였다. 또한 섬과 같이 특수한 공간을 고려한 특수 지표의 필요성도 강조하였다. 이때 유인도는 행안부, 무인도는 해수부 소관으로 구분되어 행안부 소관인 섬진흥원과의 연계가 필요한 점, 섬 진흥법에 따른 도서 지역에 대한 구분 등 섬 지역에 대해서는 해수부 자체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기에 복잡한 요소들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 이상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문연구원은 KMI에서 매년 측정하고 있는 섬 지역 농어촌서비스기준은 19개 항목 중 4개는 점검 자체가 불가하고, 나머지 항목 중에서도 2개를 제외하고 그 외는 미달한 실정임을 언급하였다. 또한 달성 항목도 지역의 여건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어촌형 지표 개발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 성주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중심으로 지역별 취약한 부분을 파악하여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면 좋겠다고 언급하며, 관련 사업을 연계해주는 것도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서비스기준을 충족하는 시점이 아니라 반대로 서비스 공백 지역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지자체에서 사업 달성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도 논의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면서, 달성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달성하지 못한 지역의 공백을 채워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중요함을 지속 강조하였다.
- 홍길수 해양수산부 사무관은 농촌협약에 준하는 해수부 사업은 어촌뉴딜사업과 어촌 신활력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업은 지역에서 관심이 많고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사업임을 설명하였다. 어촌뉴딜사업은 패키지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매년 100개 어촌계를 지원하며, 그것에 대한 노력을 평가하고 차등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II. 2023년 주요 추진 업무

- 박창석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농어촌이 도시보다 상하수도망 유지 비용에 대한 부담이 더 크며, 서비스 품질의 문제도 있지만 서비스 유지의 문제도 고민으로 남아있음을 언급하였다. 농어촌서비스기준이 권위와 주도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최소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 생명 등 국가가 책임과 관련한 지표가 들어가야 하고, 달성목표적 지표가 아니라 최소한의 향유 관점에서 개념을 정의하여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다양한 서비스 공급에 대한 지도인 '농촌 서비스 지도'를 구축하여 관리하였으면 좋겠다고 제안하였다.
- 임정우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임정우 사무관은 삶의 질 계획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농촌협약과 관련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제안하였다. 제5차 기본계획에서는 농어촌서비스기준과 영향평가, 사전협의제도를 내실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청년 및 귀농·귀촌 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스마트팜 지원, 디지털 뉴딜 등이 추진되고 있어 관련 지표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또한 슬레이트 지붕 철거가 아닌 개량에는 자부담 비중이 크므로 실효성이 높지 않다고 생각하며 향후 지표 설정 방식에 참고해주길 당부하였다.
- 박진희 농림축산식품부 사무관은 삶의 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삶의 질 법 개정안으로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사항을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각 지자체에 통보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대부분 항목이 달성한 가운데 지표 기준을 강화할지 다른 항목으로 변경할지에 대해 서비스기준협의체 및 관계부처 등과 논의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여부는 항목별로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 일괄적으로 목표 대비 달성률로 표기가 된다면 각 부처 등에서 혼돈이 없을 것이라 제안하였다.
-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농어촌서비스기준에 민간서비스 영역을 포함시킬 경우 기존 정의, 개념 변경까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거버넌스의 경우 중앙부처뿐 아니라 실제 실행력을 가진 협의체의 목소리를 반영한다면 실질적 영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강조하였다. 또한 시설에 대한 접근성도 중요하지만 서비스 전달을 발굴하고 확장시키는 것도 중요하며, 어촌형 특수 지표로 필수적인 사항을 우선 가용한 수준에서 제안·반영해볼 것을 제안하였다.



□ 제4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종합평가 3차 포럼

○ 개요

- 일시: 2023년 12월 5일 (화) 14:00~16:00
- 장소: 오송&세종컨퍼런스 회의실
- 주최 및 주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주제: 삶의 질 정책 성과평가·환류체계 개선

〈주요 내용〉

- 3차 포럼은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 종합평가 결과를 설명하고 삶의 질 정책 성과평가·환류체계 현황 공유 및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1건의 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되었다.
- 정문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 종합평가 결과와 삶의 질 정책 성과평가·환류체계 현황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후 현행 정책 성과평가 체계의 문제점과 과제에 따른 개선 방향으로 농어촌 삶의 질 시행계획 대상 과제의 전반적 재조정이 필요하며 핵심과제 대상의 정책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체계 강화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농어촌 영향평가 및 사전협의제도의 정책환류체계 제도 간 연계성 강화 및 통합 등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협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주요 토론 내용〉

- 성주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주제로 종합토론이 진행되었다.
- 심재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사전협의제도 대상과제는 법령상 반드시 전년도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에서 정하지 않아도 되며, 영향평가 결과로 사전협의제도 대상과제를 선정하여 이행계획서를 작성하고 시행 점검을 차년도에 진행하는 것도 방안일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지역에서의 이행력을 갖추기 위해 농촌공간계획이나 농촌협약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

II. 2023년 주요 추진 업무

- 성주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제도의 세부적인 부분 개선 방안도 고민해야 하지만 부처 간 협의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성과지표와 관련하여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만족도를 성과지표로 측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며 핵심과제를 선정하는 기준 등 고민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 박세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논의된 거버넌스 및 시행계획의 이행력 담보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한편, 삶의 질 기본계획에서도 점차 투입 중심의 지표를 벗어나 삶의 질이 얼마나 나아졌는지 측정하는 지표를 분명한 성과지표로 관리하고 그 과정에서 통계 생산 방식과 같은 체계적인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지역단위에서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입장이 다를 수 있어 거버넌스 레벨 간 소통 채널을 정기화하여 각 입장에서 관련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 제안하였다.
- 김동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앙과 지역단위 사업의 방향성이 상이하고, 성과지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지역에서의 효과는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비대면 진료 확대로 인해 의료서비스 여건 전반이 개선되는 것은 농어촌 지역의 의료서비스 여건이 개선되는 것과 별개의 문제며, 특히 비대면 의료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농촌 노인 계층의 디지털 격차가 가장 심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방문 진료 역시 농어촌 지역에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하나, 농어촌 지역은 보통 단독 원장으로 이루어진 기관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방문 진료를 수행하기에 어려운 여건을 설명하였다. 시행계획 점검·평가 중 종료되거나 지방이양 되는 과제가 발생하는데, 5개년 기본계획 도중 변경할 수 있는 정책 환경이 되도록 중간평가와 같은 기제를 만들기를 제안하였다.
- 박혜란 농림축산식품부 주무관은 매년 나오는 시행계획 점검·평가 보고서를 사무국에서 각 지자체에 전달하고 있지만, 지역에서는 중앙부처의 상황과 사업들을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음을 지적했다. 이에 아카이브나 라이브러리 시스템이 정식으로 구축되고 이용법에 대한 교육이 동반된다면 각 지자체 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 이상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문연구원은 모니터링, 영향평가 등의 과제 평가 절차에서 부처와 충분히 협의하고 시급성이나 사회 현안을 고려하여 과제를 선정할 것을 언급하면서, 해수부, 행안부와 별도로 어촌 지역의 사업을 논의하는 협의 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언하였다. 농특위가 삶의질위원회 업무를 맡게 된다면 실무위원회 기능을 분과위원회에서 담당하게 될 수 있을 것이며,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과 관련한 권고사항들이 본위원회에 상정된다면 강제성을 갖게 되고 현재보다 더 논의의 체계성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 2023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 컨퍼런스

○ 개요

- 일시: 2023년 12월 21일 (목) 13:30~17:00
- 장소: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남측) 318호
- 주최 및 주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주제: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농어촌

〈주요 내용〉

- 2023년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 컨퍼런스는 한 해 동안의 농어촌 주민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살펴보는 자리로, 전문지원기관의 삶의 질 정책 및 관련 연구 성과에 관한 2건의 발표와 2건의 현장 우수사례 발표,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의 성과를 점검하고 제5차 기본계획의 수립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특별주제 토론이 진행되었다.
- 1부에서는 이상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의 개회사에 이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유공자 표창 및 전문지원기관 발표, 우수사례 발표가 진행되었다.
- 권인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질정책연구센터 조사연구팀장은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KREI 활동 및 향후과제’를 주제로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을 설명하고 전문지원기관으로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주요 업무와 2023년 주요 추진 성과와 함께 향후 과제와 방향에 대해 발표하였다.
- 이상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촌삶의질연구실장은 ‘어촌 삶의 질 향상 사업 성과와 미래 방향’을 주제로 어촌 삶의 질 사업의 성과와 사업 방향, 어촌 삶의 질 향상 사례를 발표하였다.
- 양군모 세화마을협동조합 마을 PD는 ‘마을사업이 영광이 된 이야기’라는 주제로 주민이 협동조합을 이루어 마을사업을 함께 운영해가는 제주 세화마을의 사례를 소개하였다.
- 이호성 농업회사법인 서당골 사무국장이 ‘채움과 나눔의 마을공동체, 행복을 창출하는 사람들의 마을이야기’라는 주제로 문화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이룬 순천 문성마을의 사례를 소개하였다.



〈주요 토론 내용〉

- 2부에서는 김용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주재로 제4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종합평가 및 개선방향을 논의하는 특별주제 토론이 진행되었다.
- 이상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촌지역 공동체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내년 8월에 시행될 예정으로, 해당 법률을 근거로 농촌 공동체에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기 좋은 여건이 될 것이며 제5차 삶의 질 기본계획에 활용할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농촌공간재구조화법」과 연계하는 방안도 논의하는 토론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김동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어촌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건서비스나 교육·돌봄 등 복지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추진과제별 100% 달성도 중요하나 실질적인 농어업인의 체감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아낌없는 투자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
- 장세길 전북연구원 전북학연구센터장은 사업 추진에 도시와 농촌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실질적인 성과지표를 만들어 주민의 삶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후 지방 연계 사업의 모니터링을 계속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유사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육·문화 부문에 주민의 여행 복지 차원의 사업을 새롭게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문화를 통한 사회적 치유 관점에서 추진되고 있는 문체부 사업을 제5차 기본계획에 반영하기를 제언하였다.
- 김용욱 전남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제5차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인구감소 및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서비스가 지속 제공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거점과 배후마을 간 상호 기능 연계 강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예로 들어 설명하였다. 특히 농촌형 교통모델 다변화 사업도 연계 추진할 것을 제언하였다. 또한 ICT 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서비스 혁신을 이루고, 청년인구의 농촌 정착을 지원하는 주택확보 방안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순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창업과 고용 정책이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으며, 제5차 기본계획에서는 지역 자원 활용 소득 기반 다각화 사업에 농업인이 어떻게 하면 잘 참여할 수 있을지 고려해보기를 당부

II. 2023년 주요 추진 업무

하였다. 또한 귀촌인과 농촌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일자리 지원 사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2024년을 기점으로 일몰되는 중요한 사업들의 대체 사업을 고민할 것을 강조하였다. 농어촌 여성 취업 지원과 일손 부족 해소 정책군은 5차 때 별도 분리하기를 제안하였으며, 농촌 여성 취업 지원 사업에 농촌형 새일센터 운영 사업 이외에 다른 사업들도 검토해주기를 제안하였다.

- 한이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질정책연구센터장은 제5차 기본계획에서는 삶의 질 정책의 목표가 다양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농촌의 강점을 지닌 지표, 항목들을 발굴하고 집중 육성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청년, 관계인구, 생활인구들이 농촌에서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으며, 정책 성과 달성도와 주민 체감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사업 종료 후에도 주민 만족도를 측정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관리 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2023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 컨퍼런스〉





3.2.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운영 지원

❖ 주요 추진 내용

- 전문지원기관은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3개 분과) 운영을 지원한다.
 - 2023년에는 본 위원회, 실무위원회, 분과위원회(보건·복지)가 각각 1회 개최되었다.
- 2023년 6월에는 정기 심의·보고 사항 관련 안건을 실무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였다. 이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본 위원회를 서면회의 방식으로 개최하였다.
 - 실무위원회와 본위원회 안건은 2022년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 및 2023년 시행계획, 2022년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 점검·분석 결과, 2022년 농어촌 영향평가 결과와 2023년 과제 선정 및 시행계획, 2022년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결과 등 5건이었다.
 - 2022년 삶의 질 시행계획 세부과제 171개에 대한 점검·평가 결과를 심의하고, 2023년 삶의 질 시행계획 170개에 대한 부문별 시행계획 주요 내용과 투융자 계획 등을 검토·확정하였다.
 - 2022년 농어촌서비스기준 4대 부문 19개 항목에 대한 달성정도 점검 결과를 토대로 목표치 달성정도 저하 및 부진 항목에 대한 보완 방안을 검토·확정하였다.
 - 2022년 농어촌 영향평가 과제인 ‘분만의료 도·농간 격차 해소(보건복지부)’, ‘농어촌 영유아 돌봄 시설 확대(보건복지부·농림축산식품부)’의 평가 결과를 심의하였다. 2023년 영향평가 과제로 ‘농어촌 주민의 난방·에너지 비용 경감(산업통상자원부)’, ‘도서 지역 해상교통환경 개선(해양수산부)’를 선정하고 과제별 시행계획(안)을 심의하였다.
- 2023년 12월에 보건·복지 분과위원회가 서면으로 개최되었다.
 -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하위 법령(안) 검토’가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 농촌 지역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의 주체인 농촌 서비스 공동체 및 사회적 농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3.3.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카드뉴스 및 인포그래픽 제작·홍보

❖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카드뉴스

- 2021년부터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자체 및 마을 공동체의 다양한 사례를 효과적으로 홍보하려는 목적으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 우수사례집’ 수록 사례를 카드뉴스 콘텐츠로 제작하였다.
- 제작한 카드뉴스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공식블로그 및 삶의질정책연구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 2023년에는 총 16개의 카드뉴스가 제작·소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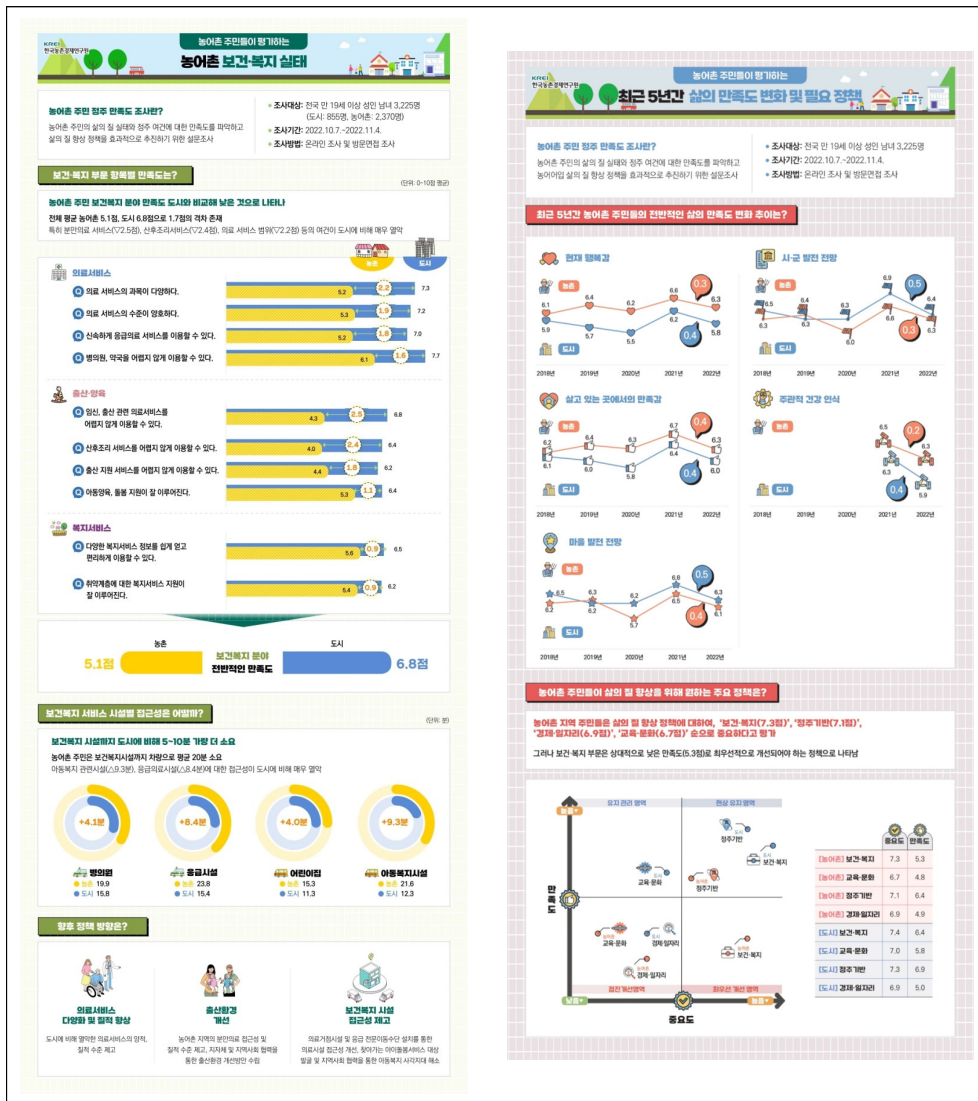
〈2023년 우수사례 카드뉴스 제작 목록〉

사례명	게시 일자	제목
부산기장공동육아 사회적협동조합	23.01.13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의미있는 도전, 부산기장공동육아 사회적협동조합
빗돌배기마을	23.01.30	농촌 천혜 자원으로부터 잠재력을 찾아서! 농업인 육성 마을 빗돌배기마을 다감농원
달빛탐사대	23.02.08	청년들의 지역 정착률을 응원하는, 달빛탐사대
세화마을협동조합 & 질그랭이거점센터	23.02.23	근자열원자래(近者說遠者來). 세화마을협동조합 & 질그랭이거점센터
금산문화의집	23.03.15	주민의 생활문화 증진을 위한 혁신적인 문화플랫폼을 만들어 가는, 금산문화의집
농업회사법인 콩세알	23.04.14	콩 한 알에 '공생', 콩 두 알에 '나눔', 콩 세 알에 '자립', 콩세알
영동여성새로일하기센터	23.05.11	경력을 이어가고 싶은 여성들의 든든한 지원군, 영동여성새로일하기센터
마카모디	23.06.16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농촌을 변화시키다, 마카모디
마을지기목공소	23.07.14	10년 후에도 행복한 합천을 만들자, 마을지기목공소
달리는 행복나눔 이웃들	23.08.17	코로나19를 넘어 변함없이, 양평군 달리는 행복나눔 이웃들
아트랜스파머	23.09.20	지역의 문화자원을 만드는 청년들, 아트랜스파머
사회적협동조합 선흘곳	23.10.13	자연과 더불어 사람을 부르는 마을, 사회적협동조합선흘곳
강진 푸소(FU-SO)	23.10.30	주민 주도형 웰니스 농촌체험관광, FUSO-맘 확 푸소!
달강세월협동조합 & 달강마을	23.11.15	평범한 일상 속에 특별함을 더하는, 달강마을
하례리생태관광마을협의회	23.11.29	지속 가능한 생태관광지로의 도약, 하례리생태관광마을협의회
디엠지편치볼숲길	23.12.14	산촌 주민들이 접경지역의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 DMZ편치볼둘레길

❖ 농어촌 주민 정주 만족도 인포그래픽

○ 2023년부터 '농어촌 삶의 질 실태와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의 결과를 각 부문별로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인포그래픽 콘텐츠로 제작하였다.

- 2023년에는 총 7개의 인포그래픽이 제작·소개되었다.





〈2023년 농어촌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카드뉴스 제작 목록〉

게시 일자	제목
23.03.28	농어촌 보건복지 실태
23.04.28	농어촌 교육문화 실태
23.05.24	농어촌 정주기반 실태
23.06.27	농어촌 경제일자리 실태
23.08.11	농어촌 분만의료 및 출산 여건
23.08.29	농어촌 영유아 돌봄 여건
23.09.26	최근 5년간 삶의 만족도 변화 및 필요 정책